

MB·검찰의 끝없는
비리와 은폐를 끝내야

▶ 6면

아랍 혁명
시리아와 제국주의

▶ 9면

한국 경제
대외적 악재와
국내적 모순의 융합

▶ 5면

한미일 군사동맹
대중국 포위망과
재앙의 불씨

▶ 6면

한국 정치
안철수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 10면

발행인_최성호 편집인_최성호
인쇄인_ (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서울다08179 (격주2)
등록연월일_2009년 1월 12일
주소_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02-777-2792 팩스_02-777-0211
제보_02-777-2791 E-Mail_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20

Left21.com

제84호 | 2012년 6월 25일 ~ 7월 8일 | 값 1,800원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 노동자 연대

리포트21

은행·부자 '구제'에 맞서는 유로존 노동자들

▶ 관련기사 3·4·5면

우리도 이들처럼

유럽

전역에서 보통 사람들의 돈이 은행가와 부자 들을 구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방키아 은행에 1백9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했다.

지난주 영국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은 은행들에게 1천4백억 파운드를 지원했다. 오스본은 신용위기의 발생을 피하려고 애썼지만 어쩔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스에서도 '트로이카'는 엄청난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 추가 긴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체제를 구하려는 이런 시도에 도전하는 움직임이 조직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총파업과 시위를 벌여 온 그리스 노동자들은 추가 긴축 정책에 맞서 싸울 의지를 다지고 있다.

스페인 북부에서는 광산 노동자 8천 명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한 달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하루 총파업이 벌어졌고 연일 대규모 시위가 진행 중이다.

영국에서도 버스 운전사, 식품 노동자, 교사와 기술자들이 반격을 시작했다.

지금 이 나라에서도 임단협 시기가 다가오면서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이 파업을 준비하고 있고 민주노총도 8월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긴축에 맞선 강력한 저항을 통해 정치 지형도 급진화시키고 있는 유럽 노동자들에게 배워서 투쟁을 건설해 나가자.

사진 출처: mercedesbenz (블리카)

이집트 “군부에 맞서 혁명을 지키자”

▶ 관련기사 8·9면

리포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 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누구의말일까요?

“기상이변에 대비해 추진된 수자원 인프라 개선 사업(4대강 사업)은 홍수와 가뭄 모두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

이명박, 1백4년 만의 가뭄이 안 보이냐

“결혼을 안한 건 위선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문수의 박근혜 ‘디스

“새누리당은 세비를 다 내놔오니 이번 달은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가져오고 있다’고 검찰에 대놓고 공표한 것이나 마찬가지”

새누리당 조해진

“요즘 아이들처럼 ‘식스팩’ 형상도 얼핏 보인다.”

이명박의 젊은 시절 상의 탈의 사진을 보도하며 아부하는 <매일경제>

“심부름센터 의뢰해도 검찰보다 낫겠다.”

민주당 박영선의 일갈

“<동물의 왕국>을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으로 꼽아 그 이유를 묻자 ‘동물은 배반하지 않잖아요’라고 말하더라.”

박근혜와 인터뷰했던 민주당 박영선

“지금부터 색깔론을 ... [더] 철저히 하자는 것이다.”

<조선일보> 김대중의 집념

“요즘은 종북 교육이 대목”
반공 교육에 여념 없는 군 관계자

“우리의 혁명 성지들을 돌아보고 진상품까지 바친 역대 통치배들은 ‘종북’이 아니냐 ... 정몽준, 김문수 등이 우리에게 와서 한 말들을 모두 공개하면 남조선 사람들이 까무라치게 될 것”

북한 당국의 협박

“취 편한 세상~”
4대강 공사로 이명박과 건설사만 배불렀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

“개당 2원에 팔린 새누리당의 심장”
새누리당 당원명부 매매 사건에 대한 한 네티즌의 지적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격주 월요일 저녁 7~8시(다음호는 7월 9일)

강남역 1번 출구
해화역 4번 출구
건대입구역 5번 출구 건넌로 롯데백화점 앞
수원역 지하상가 1번 출구 앞

격주 화요일 저녁 7~8시(다음호는 7월 10일)

홍대입구역 8번과 2번 출구
울산 현대차 4공장 구 정문 건너편 6시 45~8시 40분

서점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사점(건국대앞), 풀무칠(성균관대앞), 이음책방(대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통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레프트21> 온라인

③ <레프트21> 트위터를 팔로우해 주세요.
@left21twit

f <레프트21> 페이스북의 팬이 돼 주세요.
bit.ly/left21fan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www.left21.com

제주 ‘해적’기지 표현 김지윤에 대한 경찰수사 시작

당당한 투쟁에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

지난 3월 김지윤 씨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정부와 해군 당국을 ‘해적’에 빗대는 ‘인증샷’을 트위터에 게시했다. 해군참모총장이 나서 이것이 명예훼손이라며 김지윤을 고소했고, 3개월이 지난 6월 4일 마포경찰서는 김지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지금 김지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은 ‘종북’ 논란을 등에 업은 진보진영 마녀사냥의 일환이다.

정부는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구럼비 바위 폭파를 강행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연행했다. 이 때문에 연예인들까지 나서서 트위터에 해군기지 건설 반대 인증샷을 올리며 분노를 표출했다.

김지윤도 구럼비 바위 폭파를 막으려고 해상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을 폭행하는 해경을 ‘해적’에 빗대 비판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문정현 신부를 비롯한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은 경찰과 정부를 ‘해적’이라 부르며 정당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었다.

아름다운 자연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해군기지 건설은 현지 주민들의 말마따나 “깡패, 해적질”과 다름없다.

그러나 조중동 등 보수언론들은 김지윤을 맹렬히 공격했고, 국방부 대변인은 반성을 요구했다. 급기야 해군참모총장이 김지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울분을 울곧게 대변한 사람에게 국가 기관이 재갈을 물리려 한 것이다.

그러나 김지윤은 권력자들의 십자포화 속에서도 당당하게 운동의 대의를 지

고권일 강정주민대책위원장과 함께한 김지윤 ‘해적’기지 반대는 강정 주민의 억울함과 분노를 대변하는 말이었다.

켰다.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도 “김지윤을 공격하는 것은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 자체를 겨냥하는 것”이라며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지윤을 방어하는 서명운동에 강정마을 대책위 고권일 위원장, 강동군 마을회장을 비롯해 수많은 주민들이 동참했고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쏟아졌다.

문정현 신부, 최현국 목사, 명진 스님을 비롯한 종교인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과 전교조·금속노조·언론노조의 활동가들, MBC 파업 노동자들과 아나

운서들 등 이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바라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도 방어성명에 동참했다.

한국진보연대, 민중의 힘, 반전평화연대 등 사회단체들도 방어성명을 발표했다.

해군 당국의 고소에 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상희, 박주민 변호사가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해 김지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노업 촛스키를 비롯한 국제적 저명인사들이 “김지윤에 대한 혐의와 법적 소송 등을 즉각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더 자세한 연대

MBC 노조 이용마 홍보국장 인터뷰

“이 파업에 공정방송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MBC 노동조합이 낙하산 사장 김재철의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지 1백50일에 접어들고 있다. 최근에도 사측은 <PD 수첩>에서 4대강 문제를 파헤쳤던 최성호 PD와 전 노조위원장 박성재 기지를 해고하며 “언론 대학살”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사측의 계속된 탄압에도 불구하고 MBC 노조는 6월 30일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는 등 곳곳까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파업으로 가장 먼저 해고당한 이용마 MBC 노조 홍보국장(사진)을 만났다. 그는 “사측이 탄압할수록 조합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파업 승리를 위한 지지와 연대를 호소했다.

갈수록 파업 참가자가 늘고 언론 역사상 최장기 파업을 가능케 한 동력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동력은 역시 김재철 사장입니다. 김재철 사장은 파업의 중요한 시점마다 노조를 탄압하며 조합원들의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어요.

또 조합원들은 공정방송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이것이 이번 파업의 출발점이었죠. 군사정부 시절 이후로 처음으로 취재하다가 시민들에게 비난받는 일을 겪으며 조합원들이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재철 사장이 처음에 낙하산으로 투입됐을 때 우리에게 공정방송과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김재철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정서입니다.

사진 김연숙

김재철이 거짓말하는 동안 편파보도는 더욱 심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재철이 퇴진해야 공정방송을 위한 매듭이 풀린다는 시각을 조합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대선 공정보도를 위해 복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파업은 조직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일상 투쟁을 하게 되면 개별의 싸움이 되죠. 조합원 개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 주장은 ‘책상물림’적 생각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총선 때 파업을 했기 때문에 사측이 편파보도를 하고, 그것이 총선 결과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업 여부와 상관없이 총선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파업을 통해 조합원들은 어떤 변화를 겪었나요?

조중동과 KBS, SBS 등 주류 매체가 완전히 장악돼 있다 보니 파업 사실 자체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언론 장악의 결과라는 걸 몸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쌍용차나 한진중공업 등 싸우는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에 대해 동병상련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것이 파업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합니다. 복귀 이후에도 이런 변화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파업에 공정방송에 관한 운명이 걸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이 이긴다면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MBC 장악을 꿈꾸지 못할 것입니다.

사측은 프로그램이 대부분 정상화됐다고 주장합니다.

재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이 <무한도전> 정도인데 그걸 두고 정상화됐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어불성설입니다. 뉴스는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시청률은 종편 수준입니다.

지금 임시 기자, 경력 PD 등을 투입하고 외주화하면서 프로그램을 망가뜨리고 있죠. 일반 프로그램 중 제대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습니다.

‘공정방송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기 도중에 기존 사장을 내쫓고 정권과 완전히 유착해 편파적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물론 이명박 정권같은 무도한 정권이 들

상황은 웹사이트 www.kjy2030.com 참고)

최근 경찰이 김지윤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다시금 시민·사회단체들과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의 지지가 모이고 있다. 이들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격의 일환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는 바(이때) 국가 기구가 개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비판을 입막을 하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6월 22일 현재 31개 단체가 경찰조사에 항의하는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평범한 시민들의 응원과 서명이 계속해서 모이고 있다.

경찰 조사를 앞둔 김지윤은 “여전히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힘이 난다”며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운동 전체를 겨냥한 탄압인 만큼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그녀는 7월 5일 경찰 조사 직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과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경찰의 부당한 조사에 묵비권으로 맞서겠다고 한다.

김지윤에 대한 강력하고 꾸준한 지지와 연대를 호소한다.

강영만

제주 ‘해적’기지 표현 김지윤에 대한 수사·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7월 5일 오전 10시 마포경찰서 앞
응원 메시지와 단체 공동성명 동참 의사를 2012kjy@gmail.com 로 밝혀 주세요.

어서서라도 공영방송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안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사장 선임 구조 등을 개선하는 것이죠. 또한 낙하산 사장이 오더라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내부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국장에 대한 임명동의제, 보도국장 직선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단체협약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파업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파업이 이렇게 길어지리라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힘든 싸움인 만큼 꼭 이기고 싶은 의지가 강합니다.

지금 김재철 퇴진 서명운동에 매우 세게 불이 붙는 듯해요. 서명을 받으러 간 조합원들이 매우 고무됐습니다. 서명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시간을 연장하기도 했죠. 팩스로 보내온 서명용지가 아침마다 수북히 쌓일 정도입니다.

개인, 가족은 물론이고 다른 노동조합에서도 조직적으로 수천 명씩 받아서 보내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서명운동과 후원 모금 등에 동참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인터뷰·정리 김지윤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일시: 6월 28일(목) 오후 5시 여의도 국회 앞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법 재개정!
민주노총 경고파업 투쟁대회
주최: 민주노총

위기의 새로운 단계와 좌파의 과제

마크 L 토마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활동가

유럽의 위기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2008년 시작된 경제 위기는 1930년대 이후 최악의 위기였다.

2010년과 특히 2011년에는 이에 맞선 투쟁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그리스, 스페인·포르투갈·프랑스·벨기에 등에서 대형 파업이 발생했고, 2011년 봄에는 포르투갈·스페인·그리스에서 '분노한 사람들' 운동이 나타났고, 가을에는 미국에서 '점거하라' 운동이 시작됐다.

이제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분노와 반란의 물결이 선거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유럽 대륙 전체에 강력한 이데올로기적·정치적·경제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프랑스에서는 올랑드가 우익 후보인 사르코지를 몰리치면서 17년 만에 사회당 후보가 프랑스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그리스에서는 이런 경향이 좀더 극적으로 표현됐다. 얼마 전 선거에서는 긴축을 지지하는 그리스 양대 정당인 그리스 사회당과 신민주당의 득표율이 폭락했다. 이 과정에서 좌파, 특히 급진좌파연합인 시리자의 득표율이 급증했다.

또, 최근 이탈리아에서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정당과 연정 파트너였던 인종차별주의 정당 '북부동맹'이 선거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독일 지방 선거에서는 메르켈이 이끄는 집권당인 기독교민주당의 지지율이 크게 줄었다.

사회 윗부분에서의 이런 정치적 변화는 두 가지 직접적 결과를 가져 왔다. 하나는 이데올로기적 변화다. 특히 올랑드의 승리는 긴축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는 숨막히는 합의를 부설했다. 물론 올랑드가 자신의 약속을 지킬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예컨대 그는 여전히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고 말한다), 선거 결과는 긴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자신감을 높여 줬다.

또 다른 결과는 경제적인 것이다. 긴축 정책을 강요하는 것의 정치적 비용이 커진 덕분에 그리스는 유로존에서 탈출하기 일보 직전이다. 이것이 특히 이탈리아, 스페인과 프랑스 은행에 얼마나 심각한 금융적 충격을 가져올 것인지에 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사실은 긴축 지지 정당들의 지지율을 깎아 먹은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 잘 보여 준다. 그것은 유럽의 경제 위기다.



6만여 명이 모였던 멜랑송의 마지막 대선 유세 유럽의 노동자들이 갈수록 왼쪽의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유로존에 속한 17개 나라 중에서 8개가 불황에 빠졌다.

독일 경제의 완만한 상승만이 유로존 전체가 더블딕 불황에 빠지지 않은 요인이다.(유로존의 대형 국가들 중에서 독일만이 2008년 위기 발생 이전의 경제 생산 수준을 회복했다.)

평균 실업률

이런 경제 위기는 엄청난 고통을 낳았다. 예컨대, 유로존의 평균 실업률(10.9퍼센트)은 1999년 유로존 출범 이래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스페인과 그리스의 실업률은 25퍼센트(청년 실업률은 50퍼센트)다.

이것은 자본축적 과정의 재개에 필요한 동력인 이윤율을 회복하기 위해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두 가지 주요 메커니즘과 연관돼 있다. 하나는 노동계급의 생활 수준을 낮춰 이윤율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이윤율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 또 다른 방법은 이윤이 남지 않는 자본을 파괴해 좀더 이윤율이 높은 생존 자본들이 번영할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경제 위기 발생 이후 각국 정부가 수요를 창출하고 '대마불사' 은행과 자동차 회사들을 구제한 결과 본격적 자본 파괴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덕분에 많은 유럽 기업은 '좋은 불황'

을 겪고 있다.

올해 초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보도했다. "유로존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 액수는 2조 유로에 달한다. 법인세 인하와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는 노동시장 개혁 덕분에 가계들에 비해 기업들의 소득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투자하지 않고 있다. 수익 창출이 가능한 투자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유럽의 기업 투자 수준은 60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넘쳐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면, 은행들은 정 반대 문제를 겪고 있다. 유로존 은행들은 사실상 파산 상태인데 이것은 그들이 2001~2008년 자산 거품에 투자하면서 만들어 진 막대한 '악성 부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1년 말 유럽중앙은행이 1조 3천억 유로를 저금리로 은행들에 쏟아부은 덕분에 유럽연합 은행 체계의 붕괴는 막을 수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수익을 못 내는 엄청난 액수의 자본이 아직도 은행 장부에 쌓여 있다. 이것은 은행뿐 아니라 유럽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 남부 국가들이 현재 겪고 있는 경제 불황과 고통의 수준은 동유럽 국가들이 소련 몰락 후 1990년대 '충격 요법' 아

래 겪어야 했던 것에 육박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진영에서 그토록 심각한 불황을 겪은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바로 이것이 전통적 정당 지지 체계를 뒤흔들면서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양극화

양극화의 수혜를 얻고 있는 것은 좌파만이 아니다. 프랑스 대선에서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이 6백50만 표를 얻었다. 그리스에서는 '양복 입고 점잔 빼는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전선과 달리 전투형 파시스트 정당인 황금새벽당이 최초로 의회에 진출했다.

인종차별주의자와 파시스트들의 악진은 좌파가 유로존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을 때 앞으로 재앙이 발생할 수 있음을 잘 보여 준다.

좌파 진영에서는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났다. (신자유주의에 깊이 현신한 덕분에) 권좌에서 밀려났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무제한적인 신자유주의에 어느 정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지지율을 약간 회복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민주의를 죽은 세력으로 폄하하는 주장들은 잘 못됐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동시에, 좀더 많은 사람이 급진적 대안을 찾으면서 주류 사민주의 원

쪽에서 대안 세력이 성장했다. 이 경향은 프랑스와 그리스에서 가장 명백히 나타났다. 프랑스 대선에서 좌파연합 후보로 나온 멜랑송은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열렬한 지지자 수만 명을 몰고 다녔다. 반자본주의신당(NPA)의 프랑수아 사바도는 이렇게 말했다. "멜랑송의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대중적 영향력을 가진 좌파 개혁주의 세력이 부활했다."

사바도는 이런 부활의 이유 중 하나로 이런 점을 지적했다. "(프랑스뿐 아니라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에서) 공산당들이 대중적 영향력을 회복했는데, 그것은 이 공산당들이 오랫동안 집권한 적이 없었고, 각종 사회 기구와 노조 조직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리스 시리자의 핵심 구성원들은 옛 친소련 그리스공산당에서 분열해 나온 그리스 공산당(KKE)의 한 분파에서 유래했다.(다만 시리자는 KKE와는 달리 노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유로존 위기가 불러온 급진화와 여기에 반대하는 저항은 반자본주의 혁명적 좌파보다는 좌파 개혁주의 세력의 영향력을 높였다. 이것은 당연하다. 대중은 자신이 전통적으로 충성하던 정당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일차적으로 좀더 급진적 형태의 개혁주의에 이끌리는 경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노동자들이 자기 힘에 의존해 싸워야 하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스스로 사회를 통제해야 한다는 혁명가들의 메시지도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변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아직은 좀더 수월해 보이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선거들로 표현된 양극화는 유럽 전역에서 계급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줬다.

따라서 앞으로 중대한 전투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 투쟁들은 급진화에 왼쪽으로 가속도를 붙일 수 있다. 특히 혁명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개혁주의적 해결책들이 현실의 실험을 받게 될 나라들에서 그럴 것이다.

혁명가들은 지금 멜랑송이나 시리자에게 표를 던지고 기대를 거는 사람들과 끈기를 가지고 연관을 맺으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 사이에도 혁명가들은 늘 일자리 파괴, 임금 인하나 나치들에 맞선 투쟁을 주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12년 6월 호 / 번역 김용욱

프랑스

깊어지는 양극화를 보여 준 총선

짐 올프리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활동가,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교수

프랑스 사회당이 6월 17일 총선에서 승리해 다수당이 됐다. 이번 승리는 1981년 이래 최고 성적이다.

그러나 사회당은 이미 재계로부터 사회당의 재정지출 공약 일부를 이행하는 것을 유보하거나 지체시키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선거 결과가 이런 압력을 더 그럴듯하게 한다. 사회당과 그 동맹자들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급진 좌파 의원들의 표가 필요치 않은 것이다.

오른쪽을 보면, 사르코지의 대중운동 연합에 소속된 한 무리의 유명인사들이 의석을 잃었다. 대중운동연합은 국민전

선 파시스트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두고 혼란에 빠져 분열돼 있다.

국민전선의 지도자인 마린 르펜은 해닌 보몬트에서 사회당 후보에게 아슬아슬하게 졌다.

그러나 국민전선은 2석을 얻었고, 이것은 1986년 이래 최고 성적이다. 2석 중 하나는 마리온 마레샬 르펜이 얻었는데, 이 자는 국민전선의 창립자 장 마린 르펜의 손녀다. 3선 국유 의원 자크 보파드 역시 당선됐다.

사회당에서 갈라져 나온 사람들, 극좌파 활동가들과 공산당의 연합인 좌파전선은 지난 선거에서 공산당이 얻었던 표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다. 그러나 의석은 거의 얻지 못했다. 프랑스 선거제도가 선거 동맹을 맺은 정당들에 유리하기 때

문이다.

좌파전선 지도자 장뤼크 멜랑송은 "우리가 독자 출마한 것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좌파전선이 "양보하지도, 순진하게 생각하지도, 조급해하지도 않고 사회운동의 기대를 대변하는 대변인"이 되겠다고 맹세했다.

이번 선거가 보여 준 것은 프랑스의 정치적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권표를 던진 사람이 44퍼센트라는 사실은 사람들이 주류 정당들이 자신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는 것을 보여 준다. 몇 주 또는 몇 달 후 다가올 긴축을 둘러싼 전투는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08호 / 번역 김준호

폴라주 ⑦⑦

폴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다 공황상태로 만들어주마~



반긴축 정서가 표출된 그리스 총선

이제 진정한 전투가 시작될 것이다

파노스 가르가나스
그리스 반자본주의 주간지 <노동자 연대> 편집자

이번 그리스 총선은 그리스를 갈갈이 찢고 있는 정치적·경제적 위기를 종식시키지 못할 것이다.

우파 신민주당이 시리자보다 겨우 17만 표를 더 얻어 간신히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신민주당은 혼자 정부를 구성할 수 없는 처지다.

선거 기간 중에 신민주당 지도자 안도니스 사마라스는 유럽연합과 구제금융 협정 내용을 “재협상”해 긴축정책을 “완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무책임한 말”을 남발하는 극좌가 아니라 자기들처럼 “책임감 있고 경험 많은” 정당만이 재협상을 할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선거 승리 연설에서 사마라스는 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사마라스가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파업과 시위 등을 좀더 강력하게 탄압하고 대규모 사유화를 밀어붙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정부는 노동계급 저항 때문에 긴축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못했던 이전 정부보다도 더 약할 것이다.

앞으로도 그리스에서는 투쟁의 불꽃이 될 것이다. 전력이나 수도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는 그리스 노동계급 내에서도 가장 잘 조직된 노동자 집단과 충돌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시리자는 5월 총선의 16.8퍼센트보



사진 출처 | Mehran Khalil (블라카)

그리스 총선 결과는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심화시킬 것이고, 더 큰 투쟁을 불러올 것이다.

다 오른 26.9퍼센트를 얻었다. 공산당과 다른 좌파 정당들은 도합 4.8퍼센트를 얻어 5월의 9.7퍼센트보다 하락했다.

그러나 반긴축 좌파 진영이 받은 표는 늘어 총 유권자의 3분의 1에 육박한다. 아테네와 피레우스의 노동계급 지역들 가운데에서는 최대 43퍼센트를 얻기도 했다.

이런 강력한 급진화는 지난 2년 동안 벌어진 총파업 17번과 도심 광장과 작업장 등에서 진행된 점거 투쟁의 결과다.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그리스 민중이 긴축을 수용하게 만들기 위해 온갖 공갈 협박을 자행한 것에 상관없이 선거 결과는 고무적이었던 것이다.

독일 총리 메르켈, 프랑스 대통령 올랑드와 심지어 미국 대통령 오바마까지 그리스가 구제금융의 대가로 긴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들은 구제금융에 반대하는 좌파에 투표하면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축출될 것이고 더 끔찍한 경제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 유럽연합의 경제 위

기는 이미 심화 중이다. 스페인은 은행 위기를 겪고 있다. 이탈리아와 다른 나라로 위기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이 제시하는 방안이 그리스의 상황을 호전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마라스와 유럽 지도자들이 크게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이 근소한 차로 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노동자 투쟁을 중단시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08호 / 번역 김용욱, 최용찬

극좌파 안타르시아의 득표율이 준 배경

혁명적 반자본주의연합 안타르시아에 대한 지지가 2009년 수준인 0.3퍼센트로 줄어 들었다. 많은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신민주당을 물리치기 위해 시리자에 투표했다.

현재 시리자 지도부는 지배계급으로부터 야당으로서 ‘책임감’있고 ‘위엄’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을 크게 받고 있다.

선거 날, 거의 모든 TV 평론가들은 시리자 소속 의원들이 기층의 운동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많은 시리자 주요 인사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런 압박을 수용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장 노동자들이 이들 지도자보다 좌파적이라고 확신한다.

혁명가들은 이런 분위기와 연관을 맺어야 하며 반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이 안타르시아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다.

나치의 성장을 도운 우파

그리스의 주요 나치 조직인 황금새벽당은 5월 총선과 비슷한 득표율을 얻었다. 이것은 신민주당의 공공연한 인종차별주의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았다.

이 보수 세력은 나치들의 주장을 쫓아 ‘불법’ 이민자들을 대거 추방하고 도시를 이민자로부터 ‘재점령’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단 한 가지 차이점은 황금새벽당이 이를 자위대를 통해 실행하겠다는 것이고, 신민주당은 경찰을 통해 ‘합법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었다.

선거 결과

- 신민주당 1백29석 - 제1당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50석을 포함한 의석
- 시리자 71석 - 의회 내 제10당이 됨
- 사회당 33석 - 유럽연합의 긴축안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주류 정당
- 독립당 20석 - 긴축을 반대하는 우파 정당
- 황금새벽당 18석 - 파시스트
- 민주좌파 17석
- 공산당 12석 - 긴축 반대



맑시즘2012MARXISM 그리스 사회주의자 방한 강연

소티리스 콘토지아니스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지도적 당원이자 반자본주의 주간지 <노동자 연대>와 격월간지 <아래로부터 사회주의> 경제 전문 정기 기고자다. G8 반대, 나토 반대 시위 등 반자본주의·반전 운동의 주요 조직자였다.

- ▶ 오늘날 그리스의 경제·정치 위기 그리고 저항
- ▶ 유럽연합과 유로의 미래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 ▶ 오늘날 개혁과 혁명(최일봉 다투게 운영위원과 공동 발표)

※ 참가 신청·문의는 16면을 참조하세요.

스페인까지 흔들리자 공포에 빠진 지배자들

조셉 추나라
(마르크스, 자본주의의 비밀을 밝히다)(책갈피) 저자

유로존에서 경제 규모가 넷째로 큰 스페인 정부가 유럽연합에 8백10억 파운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앞서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요청이 있었다.

스페인 정부가 마침내 외국의 도움 없이 불안한 은행 시스템을 구제할 방도가 없다고 인정하면서 요청에 나섰던 것이다. 정부 차입 이자율이 터무니없이 높아지면서 스페인 정부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여 있었다.

스페인에 자금이 투입된다고 해서 25퍼센트에 달하는 실업자들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임금과 연금 삭감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 자금은 은행들을 위한 구명줄이며 유로존에 필요한 시간을 벌여 주는 수단일 뿐이다.

그러나 스페인과 여러 나라들이 직면



사진 출처 | mercedesmenendez (블라카)

스페인 은행 구제금융은 단지 위기의 서막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한 문제들은 재발하고 말 것이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의 긴급회동에서 보듯이 경제 위기는 실로 심각한 지경이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확산됐을 때 스페인 경제학자와 정치인 들은 자국 은행들의 악성 부채 비율이 낮다고 자랑스레 말했다.

심지어 최대 상업은행인 산탄데르 은행은 휘청거리는 일부 영국 은행들을 인수하면서 자금을 탕진했다.

더욱이 스페인 은행들은 자국에서도 건설과 부동산 부문의 버블에 직면했고 저리의 신용으로 이를 감당하고 있었다. 이 버블이 터지자 악성 부채와 팔리지 않

는 부동산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세계경제 성장은 대부분 신용 덕분이었다.

자본주의 체제가 호황이라면 이윤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았고 부채 부담은 늘어만 갔다.

회복을 알리는 징조도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최근 고용 수치는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중국의 성장은 둔화되고 유럽은 진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의 지배자들은 스페인 은행 구제금융이 스페인 국가 구제금융의 서막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은행 구제금융으로 국가 부채는 더한층 늘어날 것이고 서막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은 한층 더 커질 것이다.

스페인 국가 부도는 IMF와 유럽의 구제 기금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때문에 유럽의 지배자들은 여러 대비책들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다.

그들이 유일하게 합의한 것은 공공부문과 노동자 계급을 공격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급함

그러나 이러한 ‘정책’조차 그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유럽 지배자들이 애호하는 긴축 조치 대부분은 이미 스페인에서 시행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위기는 그치지 않고 있으며 긴축은 이제 아래로부터 일어난 반격을 받고 있다.

스페인 구제금융에 다급하게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배자들이 그리스 총선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이기도 했다.

합의된 구제금융 협상안을 거부하는 그리스 정치인들이 만만치 않은 득표율을 얻을 것으로 보였다.

긴축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의 득표율을 제고할 연이은 대중 투쟁들은 이제 지배자들에게 제2의 공포가 될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07호 / 번역 천형석

유로존 위기의 불길이 한국까지 번질 것인가

한국 경제도 세계경제 위기의 불뿔을 맞고 있다.

수출은 3개월째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유럽 경제 위기 때문에 올해 4월까지 대유럽 수출은 18.5퍼센트나 줄어들었다. 중국 경제성장률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대중국 수출도 줄었다.

특히 조선업은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고급 배를 수주하고 생산을 다각화한 대기업은 그나마 상황이 좀 낫지만 중소기업은 줄도산과 대량해고 위기에 처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다른 지역보다 상황이 나았던 미국마저 예상 경제성장률을 낮추면서 한국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그런데 대외적 악재가 한국 경제에 잠재해 있던 내부적인 문제와 만나면서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다.

1천조 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는 그야말로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과 같다. 게다가 한국은 ‘국제 현금인출기’라고 불리고 있는데 외국 자본이 대거 빠져나가 자금 경색이 벌어지면, 이자율이 높아져 부채 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1990년대 일본과 2008년 미국, 최근 스페인에서 벌어진 일이 한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여기저기 거품과 부채만 쌓여 있을 뿐, 사람들이 빚을 갚고 소비를 늘리기 위한 투자와 성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2008년 위기 때 극명하게 드러난 자본주의의 이윤율 저하 위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지배자들은 부채에 기반한 성장을 추구해 왔다.

특히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에 이명박 정부는 수차례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쓰며 위기를 봉합하고 문제를 키워 왔다. 기업들에게는 수조 원에 달하는 감세 혜택을 주고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자



2008년 위기 이후로 대기업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노동자 대중의 삶은 악화했고 위기의 원인은 더 깊어만 했다.

들에게 떠넘겨 왔다.

그 결과 한국의 부채 거품은 거품이 터지기 전 미국이나, 스페인보다도 더 커졌다.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금융위기 전 미국이나 스페인보다도 높다.

수령

또 거품을 부양하기 위해 쏟아부은 돈과 ‘삽질’ 사업들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재정위기가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천시가 그렇다. 최근 인천시는 공무원 연봉 10퍼센트 삭감을 추진하고, 인천대 지원금을 1백30억 원이나 줄이려 하며 고통을 떠넘기고 있다.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수천만 원의 학자금 대출 빚을 떠안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청년들, 자녀 뒷바라지하느라 빚을 지고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채 빚의 수렁에 빠진 노인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

반면, 삼성그룹은 2010년 24조 원, 현대차그룹은 13조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는 등 재벌 대기업 집단은 2009년과 2010년 당기순이익이 각각 40퍼센트, 66퍼센트나 늘었다.

이 때문에 부자와 재벌, 이를 비호하는 정부에 대한 반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그래서 새누리당마저 ‘복지’를 들먹이게 됐다.



이윤율 저하

자본가들이 투자한 돈에 비해 거둔 이윤의 비율이 이윤율이다. 일반적으로 이윤율이 높으면 투자가 활발해서 실물 경기가 활발하고, 이윤율이 낮으면 침체하기 쉽다. 자본주의에서는 기업들 간의 경쟁 때문에 기계 등 생산수단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아져서 이윤율이 저하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재벌타협론 대 중소기업 동맹론’을 넘어서야

최근 장하준·정승일·이종태(이하 장하준 등)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내고, 김상조가 《총횡무진 한국경제》를 내면서 진보진영 내에서 재벌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태인, 이병천 등이 장하준 등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고, 장하준 등이 이를 재비판하면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김상조 등은 출자총액제한과 순환출자 금지 같은 재벌 개혁 없이는 복지국가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재벌들이 독점적 경제 권력을 이용해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부를 가로채고,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재벌 집단을 약화 또는 해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하준 등은 이런 주장을 비판한다. 최저임금 인상, 복지 확대처럼 재벌의 이익을 축소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재벌의 소유 구조 개혁에 집중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설득력 있는 이유는 재벌 개혁론이 내세우는 기업 소유 구조 개편이 자유주의적 문제의식이며, 노동자들에게는 별다른 득이 될 게 없다는 점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즉, 재벌 개혁이 성공하더라도 ‘재벌 가문 5백 명 정도만 잘 먹던 걸 기껏 5만 명의 금융 자산 부자들까지 잘 먹게 만

드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장하준 등의 지적은 정당하다.

또, 재벌 개혁론자들은 독과점이나 국가 개입이 없다면 시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한다고 보며, 흔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이윤이 늘어나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본다.

장하준 등은 이런 관점도 반대한다. “대기업들이 납품 단가를 높여 준다 하더라도, 과연 중소기업 기업주들이 자신해 종업원들 임금 올리고,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그래서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할 것 같지가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소기업 기업주를 재벌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를 착취하는 착취자로 본다는 점은 옳다.

중소기업의 이윤이 늘어나야지만 임금을 올릴 수 있다는 논리를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받아들이면 자신의 기업주에 맞서 일관되게 싸울 수 없게 된다.

반면 정태인 등 재벌 개혁론자들은 장하준 등이 ‘재벌과의 대타협’이라는 잘못된 길을 제시한다고 비판한다. 재벌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조치에 반대하며 사실상 재벌을 편든다는 것이다.

이것은 장하준 등이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주주 자본주의로 보기 때문이다.

금융자본과 주식 투자자들의 단기적 이익 극대화에만 매달리는 주주 자본주의에서는 장기적인 설비투자가 줄어들어 실업과 비정규직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장하준 등은 저성장과 불평등 확대를 전적으로 주주 자본의 책임으로 돌리고 나서,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자본에 맞선 국가 개입 강화와 재벌의 경영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 위기와 불평등 확대를 전적으로 금융자본과 주주 자본의 책임으로 돌리는 장하준 등의 설명은 현실과 들어맞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재벌들은 보유 자금을 늘려 왔는데, 이것은 ‘주주에게 배당을 최우선으로 하는 단기 수익성 경영’이라는 주주 자본주의 틀로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태인 등이 “과연 경영권을 보호해 주면 재벌들이 배당금을 줄여서 투자를 늘리고 하청 단가도 올려주며 노동자 임금도 끌어올릴까?” 하고 물음을 던지는 것은 정당하다.

진실은 금융자본뿐 아니라 재벌과 같은 거대 산업자본과 국가 관료가 합심해서 신자유주의를 추진했다는 것에 있다.

장하준 등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시작된 배경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마르크스주의의 경제학은 이런 변화가 1970년대부터 분명한 이윤율 하락과 이로부터 비롯된 전 세계적인 위기에서 촉발됐다는 것을 보여 줬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단지 주주 자본의 권력 확대가 아니라 전 세계 지배자들이 이윤율을 회복하기 위해 노동계급에게 대대적으로 공격을 펼친 것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를 이렇게 봐야만, 왜 한국에서 재벌이 앞장서서 신자유주의를 추진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2008년 경제 위기를 겪은 전 세계 지배자들이 신자유주의에 끝까지 매달리는 지도 이해할 수 있다.

본질의 일부

그러므로 재벌타협론과 재벌개혁론은 각각 한국 경제 본질의 일부만을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진실의 일면만을 부각하며 사태를 왜곡하는 것을 통해, 재벌개혁론은 재벌에 맞서 중소기업과의 동맹을, 장하준 등은 금융자본에 맞서 재벌과의 동맹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본질은 재벌·금융자본과 중소기업들이 국가 관료들과 합심해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 한다는 것에 있다.

재벌타협론과 재벌개혁론 모두 이런 현실을 보려 하지 않는 것은 근본에서 자

그러나 최근 경제 위기가 더욱 심화할 조짐을 보이자 우파들은 알량한 립서비스조차 거둬들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까지 했던 노동시간 단축 제스처조차 폐기하고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얼마 전 전경련은 헌법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민주당 대표 이해찬은 심각한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며 이명박과 새누리당에게 여야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최근 민주당이 고용안정법이라며 법안을 발표했지만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를 허용한 것만 봐도 민주당의 한계를 여실히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과는 독립적인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투쟁을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 전 금융위원장 김석동은 “유럽 재정위기가 대공황 이후 인류에게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을 미칠 것이며 이로 인해 향후 자본주의 패러다임까지 바뀔 것”이라고 했다.

지배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지만 우리는 체제에 맞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대폭 인상, 부도 기업 국유화, 정리해고 반대, 민영화 반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확대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재원은 있다. 지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금융권에 묶여 있는 돈만 30조 원에 달한다.

투쟁을 통해 분배를 요구해야 한다. 지배계급의 정치적인 공격에 맞서면서 최근 조금씩 살아나는 노동자 투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정선영

본주의를 뛰어넘지 않는 그들의 개혁주의 정치와 관련 있다.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경제를 더 효율적으로 성장시킬 대안을 찾으며 자본의 일부분과 동맹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하준 등과 정태인 등은 모두 조직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개혁의 걸림돌 취급하며 비판한다.

그러나 지배자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복지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과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해 함께 싸우도록 고무해야 한다. 특히, 투쟁 속에서 단련돼 온 조직 노동자들의 자본주의를 마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중요하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투쟁을 폄하한다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과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간질해 분열시키려는 지배자들의 술책에 말리게 된다.

1930년대 대불황 이래 최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요즘처럼 자본가들이 양보할 여력이 별로 없는 시기라면 노동자들의 단결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며, 재벌뿐 아니라 모든 자본가들에 맞서는 거대한 투쟁을 건설하고 이를 체제를 위협할 만한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가들의 이런저런 세력과 동맹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관점에 서야만 한다.

강동훈

재앙의 불씨를 키우는 한미일 삼각 동맹

6월 14일에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은 동아시아에서 격화하고 있는 제국주의 경쟁의 한 단면을 보여 줬다. 회담 직후에 나온 공동성명의 핵심은 “한국이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전략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이었다.

한미일 삼각 동맹을 더욱 가시화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일 군사협정 추진을 더욱 재촉했다.

이밖에도 미국이 대중국 포위망의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인도의 동방 정책을 지지하는 등 곳곳에 중국을 겨냥한 내용이 들어 있다. 한미동맹이 아프가니스탄 파병 같은 범세계적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도 확인했다.

특히, 한미 양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연합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지역 MD 체제에 한국도 참가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이미 2009년에 주일 미군 사령관 에드워드 라이스는 “[한미일] 3자 정보 공유가 이뤄져야 더욱 효과적인 MD가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서해에 일본 이지스함 배치가 추진되고 한국과 일본이 군사협정을 맺어 정보를 공유하려는 것도 미국의 아시아 지역 MD 구상과 무관할 리 없다.

게다가 6월 21~22일 한미일 해군은 제주 남방 해역에서 대규모 연합 해상 훈련을 실시했다. 한미일 3국이 모두 참가해 한반도 인근에서, 게다가 미 항공모함까지 포함해 합동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외에도, 북한을 압박하고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국군과 주한 미군의 전력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최근 계속되고 있다.

주한 미군은 북한의 서해 기습 가능성 등을 핑계로 아파치 헬기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한강 이남으로 철수하기로 한 미 2사단 일부 병력이 서부 전선에 잔류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지 않고 유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 시작했다. 또한 한미 양국 정부는 한국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3백 킬로미터에서 5백 킬로미터 이상으로 늘리는 문제도 협의하고 있다.

이런 일들은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 중시’를 내세우면서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며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을 일부 조정하는 큰 그림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 미국 지배자들이 직면한 큰 골칫



유엔보안회의

6월 14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 커다란 재앙을 낳을 수 있는 이들의 협력을 저지해야 한다.

거리가 바로 중국의 부상이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패배와 2008년 경제 위기로 휘청거리는 사이에 중국은 상대적으로 떠오를 수 있었다.

중국이 아시아에서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은 수년 전부터 급격히 증대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정학적 영향력도 키우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지배자들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포위망을 구축하려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군사적·외교적 역량을 더 쏟아야 하는 상황이다.

중심축 이동?

그렇다고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빼서 아시아로 중심축을 이동한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다. 중동의 석유는 미국의 패권 전략에서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즉 미국은 경제적 힘은 약해지는데 중동에서 패권을 유지하고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도 견제하는 난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경제 위기로 국방비를 삭감해야 하는 처지다.

이 때문에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주변 국가들을 이간질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동맹들을 더 긴밀히 묶어 두고자 한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동맹과 미·일·호주 동

맹 등을 강화하고, 이 국가들과 중국 견제에 필요한 군사비 부담 등을 나누는 것이 미국 지배자들에게 중요한 전술일 테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14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나토군 철수로 인한 공백을 중국이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인도를 중앙아시아로 끌어들이고 있다. 그리고 미국, 호주, 일본은 다방면에서 군사 협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처럼 한미일 삼각 동맹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발전시키고 있는, 매우 복잡한 대중국 군사 협력 관계의 일부다.

이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독도 문제 등으로 진척이 되지 못하던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14조 원 규모로 무기 수입을 추진하는 등 미국과 함께 동아시아 불안정을 부추기는 데 한몫하고 있다.

망둥이가 뭐든 팔투기도 뭐다고, 미국의 중국 견제 움직임에 편승해 일본 지배자들도 평화헌법 개정과 핵무장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은 중국 위협론을 핑계로 6월 20일 원자력 기본법에 “안전보장 목적”을 추가해 핵무장의 길을 터놓았다.

이처럼 한미일 삼각 동맹이 자신을 조여 오는데 중국 지배자들도 가만있을 리 없다. 지역 MD 등에 맞서 중국 정부도 미사일과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는 식으로 맞설 게 분명하다.

최근에 끝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을 읊서버로 받아들이기로 하는 등 중국 정부는 미국의 포위망에 여러 방면에서 맞대응을 펼치고 있다.

이런 과정이 아시아 지역에 긴장을 쌓게 하고 충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주변 국가들의 해상 충돌은 더욱 잦아지고 있고, 미국의 대북 압박도 한반도 서해 등지에서 국지적 충돌과 긴장을 키우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안보 전략가인 브레진스키는 수년 전에 “어떤 측면에서 오늘날의 아시아는 불길하게도 1914년 이전의 유럽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충격을 받아 파괴적인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브레진스키가 지적한 이 지역의 위협과 불안정은 오늘날 더 심각하게 발전하고 있다.

미국 제국주의의 중요한 전술인 한미일 삼각 동맹 강화를 저지하는 일이 한국의 좌파들에게 중요한 과제인 까닭이다. 따라서 지금 통합진보당 지도부 등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입장을 “재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우려스럽다. 오히려 MD 계획 백지화,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 등 반제국주의 운동을 건설하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가 진정 해야 할 일이다.

김영익

비리 지뢰밭의 폭발을 막으려 필사적인 정부와 검찰

이명박 정부의 비리 지뢰밭이 연쇄 폭발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총선 직후부터였다.

파이시티 건설 비리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들이던 최시중과 박영준이 구속됐고, 불법 사찰과 BBK 의혹도 잠복한 위험 요인이었다.

우파가 ‘종북좌파 마녀사냥’에 올인하면서 잠시 이명박의 비리가 가려지는 듯했지만, “낡은 매카시즘”이라는 역풍을 맞으면서 다시 정권의 레임덕과 비리 폭로가 이어질 상황이었다.

‘종북 정국’이 ‘비리 정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이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나선 것은 검찰이었다. 검찰은 체면치레마저 벗어던지고 황당한 수사 결과들을 내놓으며 비리들을 덮어버렸다.

6월 10일에는 국고 예산으로 대통령 일가가 개인 재산을 늘린 사건인 내국동 사저 의혹 관련자를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 13일에는 온갖 증거와 증언을 죄다 무시하고 ‘불법 사찰과 이명박은 무관하다’고 발표했다. 곧이어 BBK “가짜 편지”를 ‘진짜 편지’로 결론 냈다는 수사 결과가 언론에 흘러나왔다.

이런 막무가내식 억지 수사 결과에 사람들의 분노는 폭발할 지경이 됐다. “원숭이보다 못한 검찰”이라는 비난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였다.

여기에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더도스 공격의 배후는 없다’는 특검팀의 결론도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 이 팀은 수사의 핵심고리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빼뜨리거나, ‘악소 청소’를 이유로 압수수

색을 미뤄 주면서 이미 불신을 받아 왔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쏟아지는 분노의 화살을 돌리고 종북 마녀사냥을 이어가려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대표로 있던 CNC(옛 CNP전략그룹)를 압수수색해 통합진보당 공직 후보들과 진보단체 등 거래처 정보와 거래 내역을 몽땅 압수해 갔다.

‘종북 백과사전’

이에 발맞춰 보수 언론들은 이석기 의원의 ‘애국가’ 발언을 빌미 삼으며 ‘종북 마녀사냥’을 재개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한구는 국회에 조감제의 《종북백과사전》이란 책을 들고 와서는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에 “종북주의자나 간첩 출신”이 있다며 매카시 흥내를 냈다.

그러나 끓아서 터져 나오기 시작한 이명박 정권의 비리·부패들을 계속 덮어버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우선 정권의 비리에 검찰의 부실 수사가 더해지면서 대중의 불신과 분노를 오히려 자극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오히려 레임덕 위기를 부추겨 추가 폭로를 낳을 가능성이 더 크다.

새누리당은 제1당이 됐지만 온갖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나 청문회 요구에 밀려 개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명박의 비리 지뢰밭을 캐다 보니 박근혜의 부패 의혹까지 드러나는 상황이다.

지난해 부산 지역 저축은행 퇴출 과정에서 온갖 복마전이 드러났다. 그때 동생 박지만의 이름도 나왔다. 그는 퇴출된 삼

화저축은행 회장과 ‘절친’이고, 부인 서향희는 이 은행의 고문이었다.

그런데 박근혜가 저축은행들 구제를 위해 일한 로비스트 박태규를 당시에 직접 만났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서향희는 갑자기 홍콩으로 장기 외유를 나간 상황이다.

나아가 새누리당 당원 2백20만 명 명부 유출 사건은 ‘종북 유일체제’가 된 새누리당을 뒤흔들고 있다.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 과정에서 폭로된 이 사건 때문에 통합진보당의 선거 부정을 비난했던 새누리당의 논리가 부매당으로 돌아가고 있다.

온갖 비리·부패의 원조이고 총본산인 자들이 그것을 덮어버리며 진보를 공격하는 기가 막힌 상황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

김문성

대안이 보이지 않는 통합진보당 대표 선거

아래는 '노동자 연대 다함께'가 6월 19일 발표한 성명을 축약한 것이다.

통합진보당 지도부 선거가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선거 부정과 중앙위 폭력 사태를 거치며 통합진보당이 빠져 들었던 커다란 위기와 분열을 일단락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다.

선거 부정 등을 겪으면서 쓰디쓴 환멸과 실망감을 느꼈을 많은 진보 의원 대중이 이번 선거를 통해 그나마 통합진보당이 위기를 극복하고 진보의 원칙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진정한 혁신을 해 나가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번 선거에서 이런 한가닥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인물과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번 선거의 핵심인 대표 선거의 구도를 보면 이것이 명확해진다. 대표 선거에는 현재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기갑 전 의원과 강병기 전 경남정무부지사가 출마해서 경쟁하고 있다.

호지부지

먼저 자주파 진영의 부산·울산·경남연합을 기반으로 해서 출마한 강병기 후보는 사실상 '혁신'에 미온적이거나 저항해 온 목소리를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구당권파가 사실상 강병기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강병기 후보가 당선하면 선거 부정과 중앙위 폭력 사태 등 많은 진보 의원 대중을 실망시켰던 문제들이 호지부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강병기 후보가 “진보적 정체성을 지키”겠다며 현재의 혁신비대위와 차별성을 굿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사실, 구당권파도 이런 식으로 지금의 구도를 왜곡해 왔다. 그러나 진보적 정체성을 후퇴시키고, 참여당을 끌어들이고, 민주당과 '묻지마 야권연대'를 하고, '유연한 대중적 진보'가 돼야 한다고 앞장서 주장해 온 것이 바로 구당권파였다.

강병기 후보는 이런 방향의 최선두에 있었다. 지난 총선 때 '묻지마 야권연대'를 위해 심지어 새누리당 출신 후보와도 단일화를 추진했던 것이다. 결국 강병기 후보는 비(非)혁신과,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보여 준다.

반면 참여당계·진보신당계·인천연합 등을 기반으로 한 강기갑 후보는 선거 부정 등에 대한 철저한 혁신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강기갑 후보의 '혁신'에는 우려스러운 것들이 더 많다. 특히 '통합진보당 새로운 특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 방향이 진보정당을 기성체제에 더 순응시키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재벌해체를 재검토하겠다', '조직 노동이 기득권층화했다'는 주장 등이 그렇다. '애국가'를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대표적인데, '국민 눈높이'와 '당원들의 평균적 정서'라는 논리로 이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대중의 공무니를 쫓는 기회주의의 전형이다. 그러나 노동자 국제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애국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강기갑 후보는 일부 필요한 혁신만이 아니라 나쁜 혁신을 더 많이 말하며, 온건 개혁주의의 연행일치를 보여 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두 후보 모두 통합진보당이 노동계급의 단결과 투쟁에 기여하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혁신'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진보의 원칙과 정체성을 복원하며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인지, 어떻게 '묻지마 야권연대'에서 벗어나 노동계급의 중심성과 투쟁성을 강화할 것인지 등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통합진보당 대표 선거에서 두 후보 중 어느 쪽도 지지하기 어렵다.

무엇을, 누구를 위한 '새로나기'인가

통합진보당 지도부 선거와 '새로나기'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쇄신안을 계기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쇄신인지는 분명치가 않다. 예컨대 유시민 전 대표는 “엄청난 민폐를 끼치고 있다. 빨리 당을 혁신해 [야권연대]에 더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갑 후보도 “야권연대 동지들”이 당의 쇄신을 기다린다고 했다. 강병기 후보도 “야권연대를 지키고 발전시켜” 가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즉, 당 쇄신의 목적이 대선을 앞두고 야권연대를 어떻게 빨리 복원할 것인가에 맞춰진 인상이다. 쇄신의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구당권파도 이미 '묻지마 야권연대'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강령 후퇴, 참여당과의 통합을 밀어붙여 왔다. 그런데 신당권파 주도 아래서도 이 방향은 이어지고 있



통합진보당 창당 대회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있는 통합진보당 신·구 당권파들. 두 세력의 대립을 '좌우 대결'로 보긴 힘들다.

다. 그래서 여전히 '국민 눈높이', '대중적 진보' 등이 주요 키워드인 상황이다.

'한미동맹 해체·미군 철수·재벌해체·진성당원제에 대한 재검토'가 새로운 특위의 주장이다. 사실 구당권파가 강령을 후퇴시키는 과정에서 이미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관련 입장을 훼손시킨 바 있다. 그러나 반제국주의라는 진보의 기준으로 볼 때,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주범인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반대 입장은 지켜져야 할 가치다.

새로나기 특위가 북한 핵, 탈북민, 3대 세습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세우는 것도 진정한 진보의 원칙에서보다는 우파적 압력에 타협하는 방식으로 제기되는 것이 역력하다.

혁신비대위가 “정당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청소년 당원들의 당권을 박

탈하는 것도 부르주아 합법주의의 반영이다. 이미 구당권파의 이정희 대표도 “정당법상 청소년 당원의 지위가 문제가 있다”며 이 방향으로 갈 단초를 보여 왔다.

국민 눈높이

노동 중심성 문제도 쇄신의 중요한 정점으로 올라와 있다. 여기서도 구당권파는 이미 '묻지마 야권연대'와 참여당과의 통합 과정에서 노동 중심성을 훼손했다. 당명에서 노동을 빼고 총선 5대 핵심기조에서도 노동을 제외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특위는 “민주노동 중심의 조직 노동이 기득권층화 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조직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위한 이데올로기였던 '노동귀족'론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

계급의 단결과 투쟁에 도움이 될 수 없다.

구당권파가 패권적으로 '묻지마 야권연대'와 참여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도 진보진영과 노동운동의 분열을 야기했다. 그 결과, 진보진영과 노동운동의 분열상을 해소하려던 진보대통합은 실패했고, 지난 총선 때 영남 '노동벨트'에서 진보 후보들은 승리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노동운동에 기반한 각 정치세력이 노동계급의 단결과 투쟁이라는 공통의 이해에 복무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정치적·조직적 독자성을 누리는 공동전선적 모델로 협력하는 것이다.

진정한 쇄신은 노동자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노동운동의 투쟁성과 급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김재현

맑시즘2012MARXISM에서

한국 진보 정치 운동에 관한 워크숍들이 열립니다

▶ 박근혜 대세론? 안철수 대안론?

— 대선과 사회주의자들의 과제 전지윤 (레프트21) 기자

▶ 왜 탈북민의 이주 자유를 옹호해야 하는가? 김영익 (레프트21) 기자

▶ 패널 토론 | 통합진보당 사태와 진보 정치의 전망

▶ '종북'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 《마르크스21》 공동 편집자

▶ 패널 토론 | 공동정부가 진보 정치의 집권 전략이 될 수 있을까?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 국가란 무엇인가? 강철구 다함께 활동가

※ 참가 신청·문의는 16면을 참조하세요.

MB '심부름센터' 검찰의 속 보이는 통합진보당 먼지 털기

검찰은 6월 1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대표로 있던 정치 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이하 CNC, 옛 CNP전략그룹)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후보로 나섰던 장만재 교육감과 선거 기획을 맡았던 CNC가 짜고서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고를 빼돌렸다는 게 압수수색 명분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진짜 노린 것은 CNC와 거래한 진보 인사들의 관계망 정보일 것이다.

당원명부가 담긴 서버 탈취와 이번 압수를 묶어 “통합진보당의 ‘돈줄’과 ‘심장’이 모두 검찰의 손에 확보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당원명부와 이를 대조하며, 대선 국면까지 필요할 때마다 진보 인사들을 소환하고, 언론에 혐의를 흘리며 통합진보당을 옥죄려 할 것이다.

매카시즘 공세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이런 식의 공격은 진보정당 전체의 의회 진출을 막고 축소시키려는 좀 더 폭넓은 의도 속에서 이뤄지는 듯하다.

특히, 검찰의 진보당 털기가 역겨운 것은 이명박 정권의 치부 가리개용으로 활용하는 행태 때문이다. 각종 비리 연루 혐의자가 법무장관이고, '종북좌파'와 전

쟁을 하겠다던 사람이 검찰총장인 상황에서 검찰이 정의를 세우려 한다'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검찰의 이런 이중잣대와 역겨운 진보정당 '먼지 털기'에 반대해야 한다.

원칙

그럼에도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CNC 일각 몰아주기 관행은 진보의 관점에서 비판받을 만하다.

2005년 출범한 CNC는 통합진보당 선거 기획 관련 일들을 꽤 많이 맡았다.

설립 이후 총 매출액 1백20억 원의 30퍼센트를 통합진보당(민주노동당 포함)에게서 벌었다. 거의 모든 선거 관련 전략 기획과 홍보, 그리고 여론조사 사업 등이었다.

기증 활동가들이 지역과 현장에서 벌인 투쟁에 대한 지지와 자발적 재정 지원에 기초해 진보적 주장을 앞세우던 기존 선거 방식과는 상이한 태도가 CNC의 선거 컨설팅에 반영돼 있다.

즉, 기성 정당의 선거 관행을 따라해 온 것이다.

한편, 당비, 학생회비, 노동조합비 등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자금 사용

여부와 사용처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

몇 년 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 예결산 보고서에는 “CNP전략그룹 등과 관련한 홍보비 지출 과정에서 공개 입찰 없이 실무자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 거래처가 선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관행은 진보진영 내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여기서 부정이 싹틀 수도 있다.

검찰과 정권의 통합진보당 공격에 반대하면서도, 진보의 원칙과 대의에 어긋나는 잘못된 관행은 원칙있게 혁신해야 한다.

김문성

군부의 쿠데타 시도에 맞서는 이집트 민중

모스타파 밋시우니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 활동가

군부(최고군사위원회)가 최근 이집트 혁명에 매우 심각한 공격을 했다. 이제 현 병이 민간인을 마음대로 체포할 수 있고, 의회도 해산됐다.

장군들은 또한 2011년 3월 합의한 헌법 선언을 수정해서 자신들에게 사실상 무제한의 권력을 부여했다.

우리는 이러한 군사 쿠데타가 오랜 기간 준비됐다고 본다. 지난주 사건들은 여러 달 동안 진행된 과정이 정점에 이르러 벌어진 일이었다.

지난 6월 2일 전(前)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가 받은 판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저항이 충분히 강력하지 못했다. 판결 직후 벌어진 시위는 이전 시위들보다 훨씬 작았다.

대중 운동이 주춤거리는 사이, 군부는 자신의 행동이 강력한 반발을 부르지나 않을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했다. 자신같이 생긴 장군들은 무슬림형제단과 맞붙어 볼 만하다고 생각했다.

지난해 내내 무슬림형제단은 군부와 긴밀하게 협력했으나, 이제 공격을 받고 있다.

대선 결선 투표에서는 무슬림형제단의 모하메드 무르시와 장군들 쪽 후보인 야흐메드 사피크가 맞붙었다. 공식 발표가 아직 나지 않았지만, 무르시가 승리한 듯하다. 우리는 무르시와 사피크가 같다고 보지 않는다. 이집트 혁명은 민중 혁명이었

고, 그러므로 이 혁명에는 우파부터 극좌 파까지 다양한 세력이 참여했다.

무슬림형제단은 혁명 세력 가운데 우파를 대표한다. 이들은 반혁명 세력이 아니다.

무슬림형제단은 무바라크의 몰락을 자신들이 군부와 협력해 권력을 쥔 기회로 보았고 실제로 정부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2011년 2월 11일(무바라크가 대통령에서 물러난 날) 이래 무슬림형제단은 보수적 단체였다. 그러나 사피크는 반혁명 세력이다.

우파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무슬림형제단과 함께 군사 쿠데타에 맞서는 저항 운동을 조직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치 세력들도 이러한 단결 움직임에 함께하고 있다.

우리는 쿠데타와 헌법 선언의 개악에 대항해 싸울 대중 운동을 건설하자고 혁명 세력들한테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자 운동이야말로 앞으로 몇 달 동안 대단히 중요한 구실을 할 것이라고 본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고, 무르시와 사피크 가운데 누가 대통령이 되면 그들한테는 노동자들의 그러한 요구를 충족할 의지도 수단이 없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자들한테는 군부의 반혁명 시도에 맞서면서 자본주의 자체에 도전할 노동자 조직을 건설하는 데 매진해야 할 중요한 임무가 있다.



6월 5일 사피크 반대 시위 반혁명 시도를 좌절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혁명을 전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이집트 혁명

이집트 혁명이 위험한 고비를 맞았다.

군부(최고군사위원회)는 언론이 이른바 “연성” 쿠데타라 부른 반동을 꺾었다. “연성”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은 유혈 사태가 아직까지는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일 뿐이다. 군부는 지난해 내내 거리낌 없이 시위대를 살해했다.

그러므로 앞으로 몇 주 동안 벌어질 일이 결정적이다. 혁명은 한 번 일어나고 마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성과를 쟁취할 수도 있지만 때때로 도로 성과가 공격받을 때도 있다.

그러나 혁명 세력과 반혁명 세력이 서로 팽팽히 맞서는 매우 긴박한 순간도

존재한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다.

군부는 권력을 확보할 기회를 잡지했고, 그 기회를 붙잡았다. 장군들은 군의 민간인 체포를 제한하는 법을 개악하고, 의회를 해산하고, 군부 자신에게 헌법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했다.

이것은 반혁명이 승리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군부의 반동에 지금 반격하지 않을 경우 그들이 혁명 세력 분쇄를 향해 더 나아갈 것이다.

군부는 이전에도 시위대를 탄압했지만, 그때마다 혁명이 되살아나 그들의 도발을 물리쳤다. 장군들은 이번에는 혁명가들이 그러한 저항을 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 도박을 건 것이다.

의회 다수당이었던 무슬림형제단은 이제 자신의 미래를 지키고자 다시 거리로 나섰다.

이 무슬림형제단은 모순에 가득 찬 단체다. 무슬림형제단 청년 활동가들은 독재를 타도하고자 죽을 힘을 다해 싸웠다. 그러나 무슬림형제단 지도부는 이집트의 기성 지배 체제에 편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했다.

도박

혁명가들은 기층에 혁명이 자신의 독립된 단체를 건설하면서, 무슬림형제단과 함께 광범한 운동을 건설해서 혁명의 성과를 지켜야 한다. 이러한 운동은

시리아와 제국주의

주디스 오어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

혁명이란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이 중심이 되는 거대한 정치 투쟁이다. 혁명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사태와 모순으로 가득하며 미리 예정된 어떤 경로나 공식도 따르지 않는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휩쓸고 있는 혁명의 물결도 마찬가지다. 이 혁명 물결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 운전한 잠재력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그 시작은 단 몇 주 사이 강력한 독재자 두 명을 무너뜨린 대중 혁명이었다. 튀니지의 벤 알리리와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는 둘 다 서방 제국주의의 충성스러운 동맹이었다.

그래서 서방의 정치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들의 뒤를 봐주다가 마침내 그들이 타도될 것이 명백해 보이자 그 제서야 태도를 바꿨다.

서방은 전열을 재빨리 가다듬어야만 했다. 미국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과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은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에서 혁명 지지 인증샷을 찍었고 민주화를 환영한다는 등 훈훈한 말을 쏟아냈다.

이들은 중동에서 조금이나마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신생 혁명 운동을 편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동시에 그들은 대중적 반란이 불러올지도 모를 급진적 변화에 공포를 느꼈다.

당연하게도 서방의 지배자들은 자유를 향한 아랍 민중의 갈망을 대변하는데 관심이 없다. 더구나 그들은 바레인과 사우디 같은 핵심 동맹국들의 민주화 운동에는 한마디도 지지를 표하지 않았다.

그들의 목적은 아랍 혁명을 가로채거나 탈선시켜 옛 독재 정권들을 친서방 정권들로 대체하려는 것이었다.

주도력

이를 위해 서방 국가들이 처음으로 주도력을 발휘한 것은 리비아에 대한 군사 개입이다. 그들은 뺑가치 시민들의 절박한 도움 요청을 개입의 명분으로 삼았다.

서방은 리비아 혁명을 포섭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성과는 양면적이다. 현재 리비아는 파편화되고 양극화돼 있으며, 리비아 민중의 바람은 실현되지 않았다.

이제 서방은 시리아 혁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이번에는 전면적 군사 개입에 좀더 미온적인 듯하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껏 유엔을 통한 군사개입 시도를 막아 왔다. 이들은 아사드 정권을 외교적·군사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국 이익을 지키려 한다.



6월 1일 출라 학살 항의 시위 시리아와 아랍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대중 봉기야말로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설 수 있는 희망이다.

그래서 서방 국가들은 사우디를 비롯한 걸프 지역 동맹국들과 함께 전면적 군사 개입 대신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 있고 유엔이 시리아에 “협상을 통한 해결”을 받아들이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 미국은 아사드가 예멘의 살레 대통령을 위해 기획된 것과 비슷한 ‘질서 있는 퇴각’을 통해 물러나길 원한다. 이렇게 하면 시리아의 억압적 국가기구를 온전히 남겨둔 채로 친서방적 정권이 집권할 수 있을 것이다.

리비아와 시리아의 혁명은 좌파 진영 내에서 일부 논쟁을 촉발했다. 좌파 일각에서는 아사드 정권이 중동에서 서방의 이권에 도전하는 세력이라고 말한다. 서방 제국주의가 아사드 정권에 맞선 반란을 사주했다고도 한다.

이들은 중동에서 조금이나마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신생 혁명 운동을 편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동시에 그들은 대중적 반란이 불러올지도 모를 급진적 변화에 공포를 느꼈다.

당연하게도 서방의 지배자들은 자유를 향한 아랍 민중의 갈망을 대변하는데 관심이 없다. 더구나 그들은 바레인과 사우디 같은 핵심 동맹국들의 민주화 운동에는 한마디도 지지를 표하지 않았다.

그들의 목적은 아랍 혁명을 가로채거나 탈선시켜 옛 독재 정권들을 친서방 정권들로 대체하려는 것이었다.

이들은 중동에서 조금이나마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신생 혁명 운동을 편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동시에 그들은 대중적 반란이 불러올지도 모를 급진적 변화에 공포를 느꼈다.

당연하게도 서방의 지배자들은 자유를 향한 아랍 민중의 갈망을 대변하는데 관심이 없다. 더구나 그들은 바레인과 사우디 같은 핵심 동맹국들의 민주화 운동에는 한마디도 지지를 표하지 않았다.

이들은 중동에서 조금이나마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신생 혁명 운동을 편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동시에 그들은 대중적 반란이 불러올지도 모를 급진적 변화에 공포를 느꼈다.

당연하게도 서방의 지배자들은 자유를 향한 아랍 민중의 갈망을 대변하는데 관심이 없다. 더구나 그들은 바레인과 사우디 같은 핵심 동맹국들의 민주화 운동에는 한마디도 지지를 표하지 않았다.

이들은 중동에서 조금이나마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신생 혁명 운동을 편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동시에 그들은 대중적 반란이 불러올지도 모를 급진적 변화에 공포를 느꼈다.

당연하게도 서방의 지배자들은 자유를 향한 아랍 민중의 갈망을 대변하는데 관심이 없다. 더구나 그들은 바레인과 사우디 같은 핵심 동맹국들의 민주화 운동에는 한마디도 지지를 표하지 않았다.

이들은 중동에서 조금이나마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신생 혁명 운동을 편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동시에 그들은 대중적 반란이 불러올지도 모를 급진적 변화에 공포를 느꼈다.

부는 아사드 정권과 타협할 용의가 있고, 망명 인사들이 주도하는 시리아국가위원회(SNO)를 비롯한 또 다른 일부는 서방 국가들, 그리고 서방의 걸프 지역 동맹국들과 기꺼이 협력하고 그들의 이익에 봉사해 줄 용의가 있다.

그러나 그밖에 많은 세력들은 근본적 변화를 바라며 이를 위해 싸울 태세다. 시리아 지역조정위원회(LCC)는 일상의 투쟁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기구로서 독자성을 유지해 왔다. 이들이 바로 시리아 혁명의 주된 원동력이다.

서방은 시리아가 파비린나 내는 종파 간 내전에 휘말릴 가능성을 과장하면서 개입 명분을 쌓고 있다. 그러나 과거 역사를 보면 제국주의 국가들이야말로 분열 지배 전략으로 종파 간 갈등을 조장해 온 당사자다.

물론 시리아에서 종파 간 갈등의 위험은 명백히 존재한다. 시리아 정권이 그런 갈등을 부추겨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정황을 보건대 반정부 운동은 종파를 초월한 단결을 추구하고 있다.

“시리아인은 하나다”라는 구호가 곳곳의 시위 현장에서 울려 퍼진다.

세계 균형

결국 어느 쪽이 승리할 것인지는 계급 간의 세력 균형에 달려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대중이 거리로 나올 것인가? 이미 일부 도시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집단적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움직임은 점차 확대될 것인가 아니면 소멸할 것인가?

이 물음들에 대한 답은 혁명의 진로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혁명의 승리는 대중의 더 광범한 참여에 이끌 어낼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만약 아사드의 탄압이 승리한다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난 함에 회

의를 느낄 것이다. 그러다 보면 외부 세력에게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되든 간에 미국은 사태를 좌지우지할 입장이 못 된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자본주의 블록이기는 해도 전능하지는 않다.

우선 튀니지 혁명과 이집트 혁명부터가 미국의 허를 찔렀다. 또 미국은 이라크에서 승리하지도 못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쫓겨나고 있다. 서방이 시리아 혁명을 포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불가피하지는 않다. 아랍 혁명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아랍 혁명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굴절시키려는 우리 지배자들의 시도에 굳건히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식으로 포장됐든 간에 일체의 개입에 반대한다. 제국주의자들의 거짓말 뒤에 숨어 있는 진정한 개입 동기를 폭로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아사드의 아랍적 정권을 타도하고자 하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지지해야 한다. 러시아 혁명에 대해 레온 트로츠키가 말했듯이, “인민 대중의 반란에는 정당화된 불필요하다이미 그 자체로 정당하다.”

아랍 민중은 중동 전역에서 역사의 무대 전면에 등장했다. 이는 중동 자본주의에 근본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다.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에 도전해야만 자본주의가 양산하는 제국주의 전쟁도 끝날날 가망이 있다.

지구상의 모든 제국주의 국가들을 끌어내리길 원하는 이들에게 가장 큰 희망은 아랍 세계 도처에서 자국 독재자에 맞서 싸우고 있는 아랍 민중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08호 / 번역 천영록

군부가 반동을 꺾을 기회를 잡다

이집트 민중은 선거에서 구정권 잔당들을 쫓아 내고 야흐메드 사피크도 떨어뜨렸다. 이러한 행동들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 사피크가 선거에서 이겼다면 커다란 자기 저하를 낳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고군사위원회는 스스로에게 모든 입법권을 부여한 계약된 헌법 선언을 발표해서 선거 결과를 무효로 만들었다.

군부는 지금 혁명적 투쟁이 찾아든 틈을 타 반동을 꺾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혁명 세력의 후퇴는 일시적일 것이라고 본다.

혁명 세력은 단결해서 군사 쿠데타에

맞서야 하고 거리의 운동을 강화해 혁명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한편 좌파 일부와 자유주의자들 가운데는 군부와 무슬림형제단에 모두 반대라는 통일전선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생각은 매우 잘못됐다. 무슬림형제단 문제는 각각의 상황과 경우에 따라 달리 다뤄야 한다.

그것은 곧 헌법 선언 수정과 의회 해산에 반대해서 우리와 무슬림형제단은 함께 싸울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무슬림형제단이 군부와 타협하는 쪽으로 되돌아간다면 우리는 그들과 한편에 서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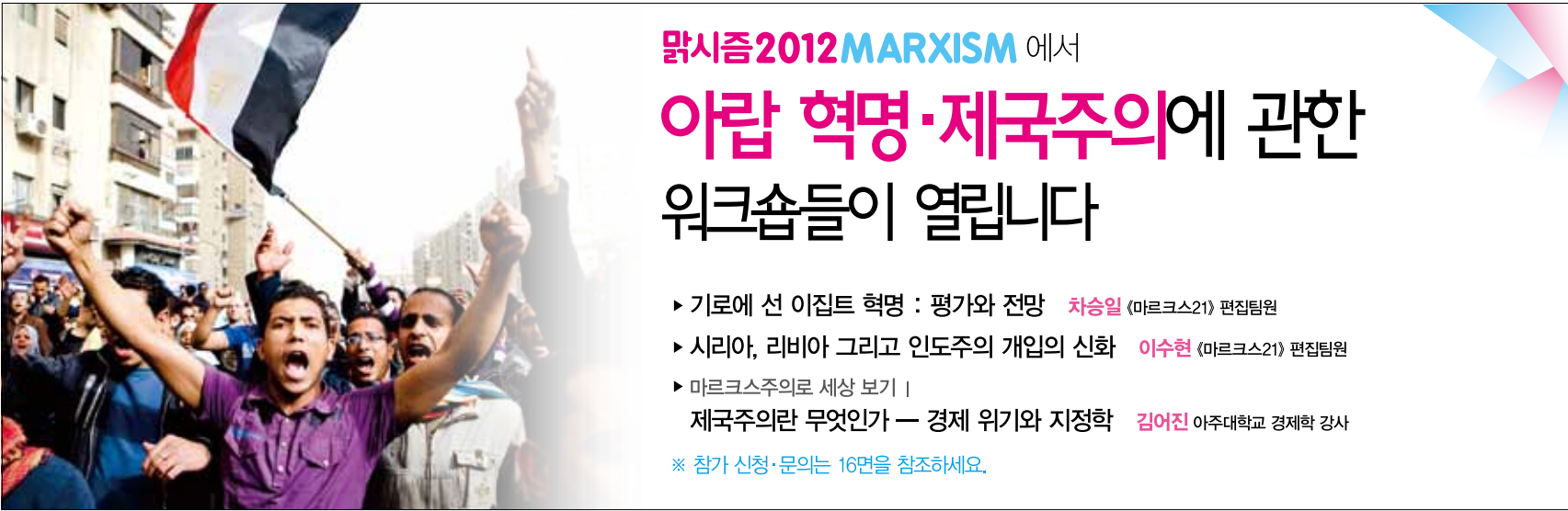
맑시즘2012MARXISM에서

아랍 혁명·제국주의에 관한 워크숍들이 열립니다

▶ 기로에 선 이집트 혁명 : 평가와 전망 **차승일** (마르크스21) 편집위원
▶ 시리아, 리비아 그리고 인도주의 개입의 신화 **이수현** (마르크스21) 편집위원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I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 경제 위기와 지정학 **김어진** 아주대학교 경제학 강사

※ 참가 신청·문의는 16면을 참조하세요.



김지태

화물연대의 요구와 투쟁은 정당하다

“더 이상 못살겠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6월 25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보수언론들은 올해에도 화물연대 투쟁의 정당성을 왜곡하고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고 거짓말을 늘어놓을 것이다. “화물 파업, 국민경제 먹구름”, “비조합원 차량 운행 폭력으로 막는 폭도의 행렬” 등등.

그러나 화물연대의 요구와 투쟁은 정당하다.

올해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요구는 표준운임제다.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10년 동안 간절하게 이를 요구해 왔다. 기업이 지불하는 운송비는 여러 단계의 화물 운송사업자와 알선·주선사를 거치는 동안 중간 수수료로 새어 나간다. 중간 착취 비율이 전체 운임의 40퍼센트나 된다.

이런 다단계 하청 구조를 개선해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운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게 표준운임제의 핵심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2009년까지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하기로 약속했지만 전혀 지키지 않았다.

고용된 노동자인데도 자영업자로 분류돼 보호받지 못했던 노동권도 보장받아야 한다. 노동자들은 졸린 눈 비벼 가며 밤새 전국으로 이동하고, 추운 겨울에는 기름값이 아까워 시동 한 번 걸지 못하고 한 평 남짓 좁은 차 안에서 쪽잠을 청한다. 그렇게 일하면서 한국 경제의 동맥 구실을 하는데도, 일하다 다치면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다.

따라서 화물운송 노동자를 포함해 2백



5월 12일 부산역 광장에서 6천여 명이 결집해 힘을 보여 준 화물연대 투쟁 선포대회

50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기름값과 차량 유지비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난 4년간 경유가는 24퍼센트나 인상됐다. 반면 노동자들의 운임은 2008년 이래 겨우 7퍼센트 올랐다. 지금 노동자들의 순수임은 법정 최저임금에

도 못미치는 상황이다.

노동자들의 고통은 대기업의 이윤으로 쌓여 갔다. 삼성전자의 로지텍과 현대그룹의 글로벌비스 같은 운송업체들은 노동자들의 돈을 가로채 비자금 창구 구실을 해 왔다. 대한통운은 올해 일사분기에 3백17억 원의 영업이익을 얻었다. 전년 대비 79퍼센트나 증가한 것이다. 글로벌비스는 1천1백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다.

지난 4년간 물가 인상을, 실질 운임 삭

감분 등을 고려하면, 운송료가 58퍼센트 인상돼야 마땅하다. 따라서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30퍼센트 운송료 인상은 최소한의 요구다.

유류 지원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화물운송 노동자 전체가 지불한 기름 관련 세금은 9조 원에 달했다. 전체 유류세의 34퍼센트나 된다.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막대한 이윤을 챙긴 대형 운송사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고, 노동자들에게는 먼

세유를 지급해야 한다. 화물연대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운임비의 58퍼센트가 기름 값으로 지출된다.

화물연대의 투쟁은 기업의 이윤 중심주의에 맞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매우 정당한 저항이고, 1퍼센트에 맞선 99퍼센트의 저항이다.

38만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승리가 모든 노동자들의 승리인 까닭이다.

물류 운송의 90퍼센트가 도로 운송인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물류 마비 투쟁은 자본가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며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화물연대 파업이 승리하려면 비조합원들의 파업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

비조합원들의 지지를 효과적으로 끌어내려면 산개하지 말고 항만부두와 주요 기지를 점거하고 봉쇄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그래야 파업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고, 파업 대오의 결속력도 유지할 수 있고, 연대의 초점도 형성할 수 있다.

민주노총의 연대도 중요하다. 화물연대 파업이 승리한다면, KTX 민영화에 반대하는 투쟁, 심야노동을 철폐하는 투쟁, 쌍용차 투쟁도 큰 힘을 받을 것이다.

특히, 철도·공항·항만운송 노조는 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대체수송을 실질적으로 거부해야 한다.

봉쇄 투쟁을 전개할 부산항, 의왕기지 등 주요 거점에서 연대 집회를 개최해야 한다. 파업 기금 모금도 필요하다.

정부와 사측의 악의적 왜곡에 맞서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고,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노동단체들과 진보진영이 굳건하게 연대를 조직하자.

김어진

현대차 1천5백64명 대규모 계약 해지

원·하청 공동 투쟁으로 맞서자

현대차 사측이 한시 하청 노동자 1천 5백64명을 계약 해지하고 있다. 7월 12일 까지 이들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측은 이들을 ‘2년 미만 직영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도 뉘엿였다. 그러나 이는 또다시 비정규직 굴레를 씌우는 것일 뿐이다. 게다가 2년 미만 고용이라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

이번 대규모 계약 해지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려는 술수다.

사측도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개정 파견법이 시행되는 8월 2일 이후부터 2년 미만 사내하청 노동자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는 것이다.

대규모 계약 해지 계획 발표 당일, 사측은 최병승 씨 복직 판정조차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불법파견을 정규직화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다.

사측은 한시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면 정규직의 일자리가 흔들릴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뻔뻔스럽고 역겨운 주장이다.

현대차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충분한 돈과 역력이 있다. 일자리 문제의 근본은 사측이 엄청난 이윤을 뽑아내면서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 데 있다. 설을 속에서도 묵묵하게 일했던 한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자격이 있다.

사측은 한술 더 떠 “글로벌 경제 위기”, “비상 경영” 운운하며 ‘사내하청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선동한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위기”가 사내하



4월 17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원·하청 공동 투쟁 선포식

청 노동자들 탓인가? 지난해 미국을 강타했던 ‘점거하라’ 운동이 주장했던 것처럼, 1퍼센트를 위한 탐욕스러운 자본주의 자체가 위기의 원인 아닌가?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사측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된다면, 사측은 더 많은 먹잇감을 찾을 것이다. 우리는 1998년 경제 위기 때 현대차에도 불어닥친 대규모 정리해고를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더더욱 현재 벌어지는 사측의 공격에 맞서야 한다.

‘악한 고리’ 흔들기

현대차는 올해 중간연속2교대제 정칙과 불법파견 정규직화 같은 매우 중요한 투쟁을 앞두고 있다. 사측의 한시 하청 노동자 공격은 이런 투쟁을 겨냥하고 있다.

첫째, 사측은 현대차지부와 비정규직 지회가 결의한 원·하청 공동 투쟁에 쐈기를 박으려 한다. 이 투쟁의 요구가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다. 요구안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무급 휴가, 계약 해지) 즉각 중단”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이번 공격은 현대차지부와 비정규직지회 모두를 겨냥한 것이다.

둘째, 사측은 ‘악한 고리’인 2년 미만 노동자들을 공격해 노동자들을 이간질하고 있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열시키고, 2년 이상 비정규직과 2년 미만 비정규직 사이의 분열도 꾀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벌어지는 공격의 칼끝은 단지 한시 하청 노동자만이 아니라, 2년 이상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겨누고 있다.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들도 겨누고 있다.

만약, 사측이 공격에 성공해 더 힘을 키

운다면, 중간연속2교대제와 불법파견 정규직화에서도 양보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따라서 첫째, 현대차지부와 비정규직지회가 한시 하청 계약 해지에 맞서 원·하청 공동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한시 하청 노동자들은 조직돼 있지 않아 투쟁에 나서기 어려운 조건이다. 게다가 사측은 “처우 개선”이라는 당근도 흘리고 있다.

현대차지부와 비정규직지회의 공동 투쟁이 벌어진다면, 계약 해지 당사자들도 희망을 갖고 조직과 투쟁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이미 비정규직지회와 현대차지부는 올해도 이번 계약 해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현대차지부의 구실이 중요하다. 입장 표명뿐 아니라 실질적인 투쟁 계획이 필요하다.

단결된 투쟁과 조직

우선, 정규직과 한시 하청을 가르는 사측의 이데올로기 공격을 반박해야 한다.

그리고 원·하청 공동으로 본관 출근 투쟁 등을 조직하고, 사업부별 원·하청 연대회의가 집회 등을 조직해 항의하며 투쟁 분위기를 상승시켜야 한다.

둘째, 7월 3일 대의원대회에서 1사1노조 추진이 확정되는 게 원·하청 공동 투쟁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현재 계약 해지 대상자들도 통합노조로 조직해 함께 싸울 수 있다.

그러려면 현대차지부 지도부가 나서 정규직 대의원들과 조합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5월 8일 문용문 지부장이 공개적으로 1사1노조를 추진하겠다고 칼을 뽑은 만큼,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지회 지도부는 최근 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의 교섭권, 체결권, 정의권이 보장된 1사1노조’ 추진을 결정했다. 이런 결정에는 이전 정규직지부 지도부의 투쟁 통제에 대한 불신이 반영됐을 것이고, 이해할 만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노조의 핵심 기능과 권한을 따로 두자는 것은 진심으로 노조를 통합하려는 것인지 의문을 던지게 한다. 더구나, 상층 지도부의 투쟁 통제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래로부터 투쟁과 대안 건설이지, 어느 지도부에게 권한이 있느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요구를 전제조건으로 고집하는 것은 노조 통합 취지에 걸맞지 않을 것이다. (지난호 관련 글에 대한 자기 비판적 평가 같은 온라인 기사를 보시오.)

지금 원·하청 공동 투쟁이 더 절실해졌다. 이런 투쟁과 노조 통합 추진 속에서 계약 해지 당사자들을 모아 간담회 등을 조직해야 한다. 이들에게 사측의 의도를 폭로하며, 투쟁 동참과 통합 노조 가입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런 투쟁으로 한시 하청 대규모 계약 해지를 중단시키거나 어느 정도 막아 낸다면, 향후 현대차 투쟁에서 단결의 분위기와 자신감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요구 성취뿐 아니라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이라는 노동자 연대 의식의 발전, 1사1노조를 통한 조직 강화라는 성과를 남길 수 있을 것이다.

하수영 노동자 연대 다함께 울산지회 활동가



《서구 마르크스주의, 소련을 탐구하다》

여전히 중요한 옛 소련 사회의 성격 논쟁



《서구 마르크스주의, 소련을 탐구하다》
마르셀 판 데 린덴 지음 | 황동하 옮김 |
서해문집 | 2만 3천 원

크리스 하먼

2009년에 작고한 크리스 하먼은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인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주요 이론가이자 활동가였다. 하먼은 특히, 토니 클리프가 제시한 국가자본주의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192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60여 년 동안 모든 사회주의자들이 마주해야 했던 중요한 문제가 있다. 전체 지표의 3분의 1을 뒤덮고 있는 국가(소련)가 사회주의 이상을 구현한다는 주장을 비판적으로라도 받아들여야 하는가? 만약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는 그 국가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이 “소련 문제”로 인해 셀 수 없이 많은 문서와 격렬한 논쟁 글이 쏟아져 나오고 갑론을박과 골치 아픈 토론이 이어졌다. 그러나 그 논쟁은 이론 자체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고, 외려 실천적 문제들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다.

옛 소련이 일종의 사회주의 사회거나 못해도 “노동자 국가”나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라면, 소련을 지지하는 것이 인류의 사회주의적 미래를 위한 투쟁의 편에 서는 것이었다.

소련이 어떤 의미에서도 사회주의와 거리가 멀고 자본주의보다 퇴보한 사회라고 주장한다면, 소련에 맞선 서방 자본주의를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그리고 소련이 서방과 본질적으로 같은 범주 안에 드는 사회라고 주장한다면, 둘이 피장파장이라고 해야 했다.

마르셀 판 데 린덴은 이 책에서 옛 소련 사회의 성격에 대한 논쟁의 역사를 상세히 정리해 줬다. 린덴은 80명의 이론을 탐구하고 요약적으로 제시했다. 이 80명 중 일부는 이름만 들으면 다 알 사람들이고, 다른 일부는 협소하고 고립된 좌파 서클에 있어 밖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다.

린덴은 이 책을 정리하면서 이 논쟁을 이해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20세기 좌파의 역사 내내, 특히 나치즘과 스탈린주의가 같이 1917년의 희망을 죽이던 “세기의 암흑기”에, 이런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던 사람들에게 이 논쟁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 책에서 두 가지 약점을 찾았다. 모든 사상가들을 다루려다 보니, 린덴은 더 중요한 몇몇 사상가들의 이론에서 흥미진진하고 중요한 요소들을 비껴가게 된다. 이런 태도 때문에 심지어 린덴은 “클리프를 중심으로 한 경향”[국제사회주의경향(IST)]의 몇몇 생각을 왜곡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그래서 그는, 토니 클리프가 폴 마티크와 대조적으로 “국가자본주의가 특히 자본이 빈약한 국가에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하지 않았다고 서술한다. 그러나 클리프는 1960년대 초에 쓴 “연속혁명”이라는 글에서 알제리·이집트·쿠바 같은 나라에서 “빛나간 연속혁명”이 어떻게 국가자본주의 체제가 됐는지 묘사한 바 있다.

국가자본주의

또 린덴은 “1956~1968년에 새로운 진전이라는 점에서 거의 바뀐 것이 없는 클리프의 이론 … 클리프의 추종자 사이에서 토론은 하나의 주장, 즉 소련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에 집중되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클리프가 <스탈린에서 흐루시초프까지> 소책자와 <러시아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1963년 판에서 점증하는 소련 경제의 위기 요소에 대해 자세히 탐구한 것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소련은 과연 사회주의였는가?>(책갈피)를 참고하십시오.]

린덴은 1980년대에 “클리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 국가자본주의의 붕괴를 상상할 수 없었다”고 말해 그의 실수를 더 악화시킨다. 사실, 1970년대에 쓴 기사에서 나는 이미 소련이 거대한 경제 위기에 의해 쪼개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나는 이런 논의를 <동유럽에서의 관료주의와 혁명>이라는 두 권짜리 책(1974년, 나중에 <동유럽에서의 계급투쟁>[국역: <동유럽에서의 계급투쟁>[갈무리]]으로 재출간)과, 1977년에 쓴 폴란드 관련 기사에서 더 깊이 발전시켰다. 나는 그가 다른 이론들을 대할 때라도 우리 이론을 대할 때보다 깊이가 더 있으면 좋겠다.

비판할 점이 또 있다. 이 책의 어조는 지나치게 무미건조하고 학술적이다. 린덴에게는 세 세대의 혁명가들이 이 문제로 고뇌했다는 데 대한 고려가 없다. 심지어 이 주제는 아직도 고민할 가치가 있는 데도 말이다. 21세기 사회주의를 위해 효과적으로 싸우려면 20세기에 사회주의를 구현했다고 주장하는 괴물 같았던 체제를 이해하려 애쓰는 것이 하나의 전제다.

또한, 소련의 성격을 이해하는 논의는 오늘날의 세계 체제를 분석하는 문제와 더 중대한 관련이 있다. 사회적 생산의



스탈린 집권 시절 강제 노역에 동원된 어린이 이런 사회가 사회주의일 리 있겠는가.

매우 많은 부분은 여전히 국가에 달려 있다. 어떤 사회주의자들은 국가 부문이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착취 영역 바깥에 있다고 본다. 반면 다른 사회주의자들은 세계 체제에서의 경쟁 때문에 국가·기업의 경영자들이 체제 내부에 노동자들을 자본주의 생산의 법칙에 종속시킨 비시장적 매커니즘을 만들어야 했다고 본다.

린덴은 혁명적 전통에 입각한 역사가들에게 매우 유용한 책을 썼다. 그러나 실질적 문제들에 대해 불필요하게 무심한 것이 이 책의 유용성을 떨어뜨린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118호 (2008년 3월) / 번역 김준호

함께 보세요



《소련은 과연 사회주의였는가?》
— 국가자본주의론의 분석

토니 클리프 지음 | 정성진 옮김 |
책갈피 | 2만 2천 원

침묵의 목소리 — 〈두 개의 문〉



감독 : 김일만, 홍지유
출연 : 권영국, 김형태, 류주형, 박진 등
상영관 : 〈두 개의 문〉 웹사이트 (http://blog.naver.com/2_doors) 참고

용산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입은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더구나 이 정권은 지난 3년간 산 자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울곧게도 “입을 먹는 입”이었다. 어쩔 수 없이 영화는 주변적 사실들만으로 현실을 재구성한다. 감독들은 인터뷰를 받을 수도 없고, 조사를 토대로 사건 당시를 CG로 재현할 수도 없다. 그녀들은 현실에 어떠한 가공도 할 수가 없었다. 그렇기에 이 영화는 우리에게 무엇도 강요하지 않는다. 단지 보여 줄 뿐이다.

그래서 관객이 볼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단편적인 사실뿐이다. 유가족에게 돌아오지 않는 시신, 내용을 생각을 하지 않는 수사 기록 3천 쪽, 용산을 외치는 목소리를 막기 위해 연쇄 살인 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청와대 행정관의

이메일 같은 것들. 사고를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관객은 스스로 사고할 만한 여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 여백의 시간을 기반으로 관객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는 사건을 바라보며 감독들과 똑같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의문을 안고 조용히 물 밑으로 가라앉지 않는다. 의문은 태생적으로 증폭된다. 화재의 순간은 경찰 채증 카메라에 나타나지 않는다. No Signal 이라는 글자에서, 우리들은 하나의 시그널을 읽어낼 수 있다. 증폭된 의문은 분노를 낳는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 자들은 감옥에 있기에, 감독은 진압을 한 당사자들의 목

소리를 담을 수밖에 없다. 관객의 머릿속에 가득 찬 의문들은 그 말들의 기원을 쫓아간다. “왜” 저 특공대원들은 저렇게 말을 하는 걸까, “왜” 말은 중간에 바뀌었을까, 저 침묵의 의미는 무엇일까.

지옥

화재 현장을 담지 못한 카메라는 그 순간의 진실 대신에 그 진실로 다가설 수 있을 만한 주변적 진실들을 전해 준다. 두려움에 떨면서 뛰어나오던 특공대원들에게 가져없이 도로 들어가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이들은 다시 꾸역꾸역 문으로 걸어 들어간다. 건물에는 두 개의 문이 있었고, 이들은 건물 구조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크레인 기사가 한 명도 오지 않았는데 진압은 강행됐고, 화학 소방

차도 준비되지 않았다. 이젠 더는 입을 열어 주지 않는 특공대원들의 진술서 말미에는 “지옥”에서 함께 불과 싸웠던 철거민에 대한 동질감이 드러나 있다. “우리는 같은 사람”이라고.

남일당 건물은 입이 없다. 하지만 용산은 입을 다물으로써 말을 건네 왔다. 여섯 명의 사람이 죽었고, 그 날 아침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왜”라고 물어야 한다는 이 엄청난 진실 앞에서 영화는 다시 한 번 침묵하는 용산의 소리를 담는다. 여전히 남일당은 묻고 있다. “왜” 이래야만 했느냐고. 우리는 이 무지막지한 의문의 비합리성 앞에서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이서영

기고 | 학교 현장의 괴물, 경쟁과 차별의 근원

일제고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박세영 전교조 초등동부지회 금호초등학교 교사

3년 전 일제고사로 징계를 받은 이후 6학년을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3년 만에 6학년 아이들을 교과 선생님과 만나면서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3년 전 일제고사는 제 삶에서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삶의 지형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었고, 그때부터 전교조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 돌씩 떠오르는 일제고사의 기억은 잔인무도했습니다. 불면 · 부당했고, 우리 모두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아이들도 저도 학부모들도 일제고사 즈음에 벌어지는 온갖 행태에 분노했고, 저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푹푹 몽췌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당시 일제고사를 앞두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택권을 알리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매주 주말에 주간 계획을 보내는 저로서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 예상치 않게 벌어지는 교장 · 교감 · 교육청의 행태는 분노스러웠고,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시달리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동시다발

시험 당일 학교 선생님들이 저희 반 아이들의 집에 찾아가서 아이들을 학교로 등교시켰고, 장학사와 교감은 제게 교실 밖으로 나가기를 종용했습니다. 시험 전에는 '장학'을 빌미로 교장 · 교감이 교실로 찾아와 감시하기 일쑤였고, 우리 반의 회장 · 부회장을 교장실로 불러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가 아이들 집에 전화를 해대서 학부모들이 분개했던 기억도 납니다. 교육청은 아이들에게 '담임 선생님과 1년을 함께 있고 싶으면 시험을 봐야 한다'는 협박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잔인했던 3년 전 봄, 그때의 기억을 떠



2008년 일제고사 반대 집회에 참가한 청소년들 영국, 일본에 이어 프랑스에서도 일제고사를 폐지하기로 했고 미국도 반대 운동이 커지고 있다. 교육을 망치는 일제고사 폐지하라.

올리면 다시금 분노가 끓어 오릅니다. 일제고사를 끝장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악몽은 3년 전에 끝난 것일까요? 올해 6학년 아이들을 보면서 일제고사가 없어지지 않는 한 악몽은 계속될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뭔가 이해되지 않는 6학년 아이들의 갑작스런 변화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3월만 해도 수업이 정말 재밌어서 시간이 빨리 간다며 해맑게 웃던 아이들이 사소한 일로 수업 시간에 짜증을 내고 다툼을 일삼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6학년 아이들의 이러한 변화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며칠 전 아이들과 나눈 대화는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말로만 듣던 파행 사례가 버

로 인한 아이들의 고통 · 분노 ·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말에 4~5학년 수준의 문제지를 나눠주고 월요일에 채점해서 오답 노트를 완성해야 집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아무 수업 시간이나 영어 듣기 평가를 하는 등 우리 학교가 '성취도 평가'에서 꼴찌여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을 다그친다는 것입니다.

학교 연구부장에게 정규 수업 시간에 문제 풀이를 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더니, 열심히 노력하는 선생님들에게 자칫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말과, 남한에 초6과 중3이 있어 북한이 쳐들어 오지 못한다는 시대착오적인 농담 메시지만 돌아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을 고스란히 초등학

생으로 보낸 아이들이 참으로 불쌍합니다. 일제고사가 아주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고 믿는 아이들은 "선생님, 저는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걸 어떡해요? 불공평해요" 하며 볼멘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시포스의 형벌처럼 날마다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문제 풀이에 시달립니다.

시시포스의 형벌

학교는 희망을 말하는 따뜻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어제의 나를 돌아보며 오늘 더 성장해 가는 곳, 울퉁은 가르침과 진정한 배움이 있는 곳,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곳, 내가 소중하듯 다른 사람

도 소중하며 배려와 책임을 갖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곳, 미래도 즐거워야 하지만 오늘도 행복한 곳이 학교여야 합니다.

아이들을 줄 세우고, 차별하고, 능력이 다른데도 같은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며 한 명 한 명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그런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곳이 학교여야 하는데, 학교는 지금 제 구실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일제고사가 학교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현장의 괴물, 교육과정 파행 주범, 경쟁과 차별의 근원인 일제고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구시대적 패러다임, 구닥다리 시험인 일제고사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학교 비정규직과 교사들이 연대해

‘비정규직 백화점’인 학교를 바꾸자

서지애 전교조 부천초등지회 조합원

학교 현장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이미 70여 직종에 15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을 정도로 학교 현장은 그야말로 '비정규직 백화점'이 된 지 오래다.

정부와 학교 당국은 학생 수 감소와 교육 예산의 유동성을 빌미로 비정규직 채용을 마구 늘려 왔다. 각 지역 교육청도 '학교업무경감 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교사가 담당하던 일부 업무들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왔다. 예컨대, 이전에 교사가 담당했던 '방과 후 학교 강사비 · 수감비 관리' 업무를 '방과 후 학교 코디'라는 이름으로 바꿔 은근슬쩍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해 업무를 떠넘기는 식이었다. 이렇게 정부와 학교 당국은 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그 자리에 학교 비정규직을 늘려 왔다.

학교장들은 채용 권한을 무기로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고, 계약서를 악용하고, 온갖 부당 업무를 강요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잘리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열악한 노동조건과 차별을 감수하거나, 교육청 웹사이트에 올라온 또 다른 비정규직 채용 공고를 뒤져야 했다.

지난해 경기도 부천 석천초등학교에서 학생 수 감소를 빌미로 부당하고 당한 이 모 조리종사원은 복직을 요구하며 끈질기

게 싸운 끝에 "신규 자리가 나면 최우선으로 채용하겠다"는 교육청의 약속을 받아냈지만, 지금껏 이행되지 않고 있다. 신규 채용 공고를 낸 학교에 면접을 봐도 학교장이 채용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취재한 한 초등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10년 이상 사서로 일하던 그는 학교장으로부터 기존 업무 이외에도 온갖 잡다한 업무(예컨대, 청소 · 교무보조 등)를 강요받다가 결국 사직서를 내야 했다.

사슬

그러나 이런 열악한 상황은 오히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을 촉진했다. 온갖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해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학교 현장을 바꾸는 투쟁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순식간에 3만여 명에 이르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올해는 학교 비정규직 관련 노동조합이 연대해 '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결성해 교육과학기술부와 16개의 시도교육청에 역사상 처음으로 입단협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고용하고, 호봉제를 적용하고, 전 직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고용불안을 해소하라고 요

구하고 있다. 또 방종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과도한 노동시간을 조정할 것도 핵심 요구로 제기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사용자는 교육감"이고 "교육감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실제 강원 · 경기 · 서울 등 일부 진보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이 연대회의와의 교섭을 공고하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신감은 더 커지고 있다. 교섭에 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광주 교육청도 9월부터 정식으로 단체교섭을 시작한다.

그런데도 교육과학부는 여전히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직접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억지 부리고 있고, 상당수 교육청이 이에 동조해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충남교육청은 '단체교섭 거부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에 항의해 연대회의는 서울에서 대규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6월 27일부터 정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그동안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선 만큼, '학교'라는 한 울타리에서 생활하는 교사 노동자들의 연대가 중요하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 상황은 언젠가 정규 교사들을 향한 수도 있다. 정규 교사들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해

투쟁해야 하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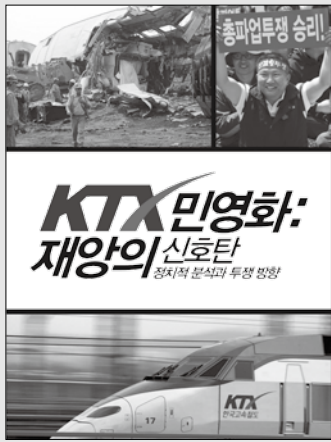
전교조 서울지부와 경기지부 등이 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연대를 표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나도 우리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대회 참가와 비정규직 노조 가입을 권하기도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천지회 권금자 지회장은 교사 노동자들에게 연대를 호소하며 이렇게 말한다.

"노동의 고단함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똑같습니다. 한 작업장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불이익을 당하면 교사들이 적극 도와 주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 가입도 권해 주십시오. 특히 전교조 교사들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단결에 가고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전교조가 연대하고 끝까지 투쟁해 승리를 거렸으면 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학교 당국은 직무를 세분화하고 고용과 임금 체계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정규 교사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분열시켜 왔다. 이제 정규 교사와 학교 비정규직이 단결해 분열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교사들이 함께 연대해 학교가 진정으로 인성과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바꿔 내자.

추천 소책자



KTX민영화: 재앙의 신호탄
— 정치적 분석과 투쟁 방향
값 : 3,000원

강동훈, 박설, 이원준, 정종남,
최용찬

"노동자 연대 다함께가 현장 취재를 통해 만든 이 소책자는 철도노조 정기대의원대회 등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는 대회장에서 품절이 될 정도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 삽화 한 장 없는 소책자를 현장 간부들이 애독하는 이유는 현재 철도노동자에게 닥친 재앙을 사회 구조적인 관점에서 살피면서도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김병구 전국철도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의 '추천글' 가운데

구입 문의 : 02-2271-2395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7월 4일(월)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Report@left21.com

건설노조

힘있는 파업과 폭넓은 연대가 중요하다

덤프트럭, 굴삭기, 타워크레인 조종사, 철근, 목수 기능공, 전기원 등 건설현장을 움직이는 노동자들이 직종을 넘어 단결해 6월 27일 파업에 나선다.

지금 건설현장은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 임금·임대료 체불은 급속도로 늘고 있다. 더구나 치솟는 물가와 유류비로 건설노동자들은 한숨과 분노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에 건설노조는 건설현장 체불근절 등 18가지 대정부 요구안을 내걸고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투쟁은 화물연대와 공동으로

진행해 왔고, 공동의 요구조건으로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쟁취와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내걸고 있다.

6월 27일 파업이 더 큰 힘을 발휘하려면 하루 뒤인 6월 28일 민주노총 경고 파업과 연결돼야 한다. 건설노조의 투쟁이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연대와 업호 속에 벌어진다면 건설노조의 쟁점이 묻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산될 것이다.

민주노총의 6월 28일 투쟁이 더 폭넓고 힘 있게 벌어질수록 건설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정부와 자본에게도 큰

압력이 될 것이다.

건설노조는 덤프트럭 등을 이용한 차량시위와 함께 서울 상경투쟁을 진행하고 이후 지역으로 내려가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직종의 요구를 반영하고 비조합원도 적극적으로 투쟁에 동참시켜야 한다. 지난해 울산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전면파업을 통해 이룬 고무적인 성과를 교훈 삼을 필요가 있다.

박재순 전국건설노동조합
서울북부건설기계지부 자부장

동국대 청소 노동자



황재민 기자

6월 11일 동국대 청소노동자 파업 출정식
쓰레기 분리장을 폐쇄하고 파업 효과를 높여 승리를 거뒀다.

단호한 파업으로 통쾌하게 승리하다

동국대 청소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쟁취, 노조탄압 중단, 민주노조 사수”를 요구하며 6월 8일부터 벌인 전면 파업에서 11일 만에 승리했다. “쓰레기를 치운다고 [노동자들을] 쓰레기 취급도 안하던 사람들에 맞서 통쾌하게 승리한 것이다. 2010년 고용승계, 2011년 임금 인상을 쟁취한 노동자들은 이로써 3년 연속 패거리를 이겼다.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은 1백2만 원에서 1백10만 원, 남성노동자들의 임금은 1백7만 원에서 1백17만 원으로 올랐다.

또 노동자들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결원이 생겼을 때 노동조합이 추천한 인원을 채용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학교 당국과 용역업체가 단체협약을 어기고 사측의 입맛에 맞는 2명을 파업 대체인력으로 투입해 어용노조에 힘을 실어주려 했지만 결국 실패한 것이다.

대체인력 투입 저지

학교 당국은 ‘이번에는 그냥 물러서지 않겠다’면서 지난 2년간 양보했던 것을 되돌리려 했다. 민주노조를 약화시키려고 복수노조를 만들고, 교직원들을 동원해 청소 노동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끌어내는 만행도 저질렀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학교 측의 탄압에도 흔들림 없이 파업을 벌였다. 학교 측이 교직원들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공격하자 곧장 학생들과 함께 학내 행진을 하면서 규탄의 목소리를 모으고 쓰레기 분리장 폐쇄와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또 쓰레기 분리장에 투입되던 대체인력을 몰아냈다. 학교 당국과 하청업체가 파업 효과를 줄이려고 곳곳에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를 몰래 치울까 봐 학교 전역을 내내 순찰하기도 했다.

학교가 양보하지 않으면 본관 점거 농성과 조계사 집회도 할 계획이었다.

결국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문제”라며 노동자들의 문제를 하청업체에 떠넘겨 왔던 학교 당국은 직접 하청업체들을 협상장으로 끌고 와야 했다. 심지어 한 하청업체가 “올해 학교와 체결한 용역비로는 임금인상분을 주지 못한다”고 하자 학교 측이 부족한 부분을 대신 내주기로 했다.

단호한 행동과 단결이 학교 측을 물러서게 만든 것이다.

청소 노동자들이 이처럼 높은 투지를 유지하며 자신감 있게 행동에 나설 수 있었던 데는 학생들의 연대가 큰 힘이 됐다. 동국대 학생들은 시험 기간임에도 ‘아름다운 연대’를 제대로 보여 줬다.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회 활동가들과 일부 학생들은 연대 집회와 학교 홍보전을 헌신적으로 진행하고, 천막 농성에도 함께 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학생들이 같이 싸워서 이겼다”면서 “이전에도 학생들이 같이 싸워 주고, 우리도 학생들이 싸울 때 같이 싸웠다.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했다.

이번 승리는 복수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대학 당국에 맞서 투쟁하는 다른 대학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청소 노동자들에게 갈 길을 보여 줬다. 동국대 청소 노동자들이 보여 준 것처럼 경제 위기의 고통을 떠넘기려는 시도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하고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재환

국제 연대

타이 노동운동가 소꿉 씨를 석방하라

국왕모독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타이 노동운동가 소꿉 프록사카웬수 씨 석방과 타이 정부의 반민주적 탄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6월 21일(목) 타이 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타이 노동캠페인 활동가이자 타이 사회주의 단체 <레프트> 회원인 파차니 씨를 비롯해 아시아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10여 명이 참석했고, 한국에서도 노동자 연대 다함께, 민주노총, 국제민주연대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소꿉 씨는 타이의 민주화와 노동운동에 헌신해 온 투사였다. 그는 <레드파워>라는 주간지를 발행하고 타이 정부의 반민주적 억압과 노동운동 탄압을 비판해 왔다. 소꿉 씨는 한국의 노동운동을 타이에 전파하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타이의 유명한 노동 가요인 ‘연대’는 그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타이 말로 개사해 보급한 노래다.

소꿉 씨의 이런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타이 정부는 그가 국왕모독죄 반대 서명을 받은 것을 빌미 삼아 되레 국왕모독죄 혐의로 지난해 4월 말에 구속하고 지금까지 석방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국왕모독죄 사례에 견주 보면, 그는 10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타이의 국왕모독죄는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을 탄압하는 한국판 ‘국가보안법’과 같은 대표적 악법이다. 지금도 레드셔츠 운동의 지도자들을 포함해 1백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국왕모독죄로 구속돼 있다. 지난 5월에는 국왕을 모독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20년 형을



진보노조

6월 21일 타이 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선고 받고 수감 중이던 62세의 암뿐 씨가 감옥에서 사망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데도, 레드셔츠 운동의 지지를 받아 당선한 잉락 총리는 자신의 오빠인 탁신을 사면하려고 쿠데타와 학살을 자행한 세력과 더러운 거래를 하려 한다. 잉락 총리는 최근 ‘국가화합법’을 제정해 2006년 쿠데타와 2010년 레드셔츠 지지자 학살 등에 대한 판결에 면죄부를 주려 한다.

국왕모독죄

‘국가화합법’ 초안에는 국왕모독죄에 해당하는 형법 112조에 대한 개정안이 전혀 없다. 잉락 총리는 자신의 선거 공약이 아니었다며 국왕모독죄 개정을 거부하고 있고, 이 악법으로 구속된 사람들을 사면할 생각도 없다고 한다. 자신의 지지

자들을 배신하고 ‘지배자들의 거래’(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노동·사회 운동 단체들은 국왕모독죄로 구속된 타이의 모든 정치수의 석방을 계속 요구해 왔다. 지난해 소꿉 씨가 구속됐을 때도 타이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반민주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곳곳이 투쟁하는 타이의 투사들에게 국제적 연대를 표한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도 이러한 노동자 국제연대의 연장선이었다.

타이 정부는 당장 노동운동가 소꿉 씨를 비롯해 국왕모독죄로 구속된 모든 정치수를 석방하고, 반민주적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이날 행동에 참가한 단체들은 만약 소꿉 씨가 석방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경 예정된 결심 공판에 맞춰 다시 금 국제 연대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최용찬

보육 운동

‘참보육 실현을 위한 전국 부모연합’이 가동하다

공적 복지 시스템으로서 보육 정책이 아니라 선거를 겨냥해 급조한 ‘이명박식 무상 보육’은 사전 연구와 조사 없이 시행됐고, 시행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재정 부족 이유를 들어 중단을 발표했지만 정작 정부는 대책도 없이 시간만 끌고 있고 부모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각계에서 ‘이명박식 무상 보육’을 비판하고 있고 무엇보다 부모들의 불안과 위기감이 크다. 이대로 정부의 정책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부모들이 뜻을 모아 올해 초부터 ‘참보육 실현을 위한

전국 부모연합’(이하 참보연)을 준비했고 현재 모임을 하고 있다.

참보연은 참된 인권 보육, 공공 보육, 무상 보육 실현과 아동의 권리, 보육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육 노동자와 모든 민주 진보 세력과 함께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참보연은 보육 교사들과 함께 정부의 잘못된 보육 정책에 항의하는 기자회견과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캠페인 등의 활동을 했다.

또한 6월 14일 ‘서울시 육아지원 정책

방안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부모 입장에서 바라는 보육 정책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다.

앞으로 참보연은 정책 토론회나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보육 주체로서 부모의 의견을 내놓는 활동도 할 계획이다.

참보연의 활동 목표에 공감하고 함께 활동할 부모와 보육 교사들을 기다리고 있다. 관심 있는 사람은 다음 카페(http://cafe.daum.net/chamboyuk)나 페이스북 그룹 ‘참보연연합’에 가입해 주길 바란다.

장미순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다함께 공개 토론회에 초대합니다!

주최 | 다함께 www.alltogether.or.kr

* 웹사이트에 토론회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서울 남부 공개 토론회
1987년 노동자 대투쟁 25주년 — 왜 노동자 운동이 희망인가
연사: 김문성(레프트21) 기자
일시: 2012년 6월 26일(화) 오후 7시 30분
장소: 전교조 서울지부 9층 강당(7호선 이수역 7번 출구에서 100m 직진 승지빌딩)
참가비: 2천 원(학생 1천 원)
문의: 010-9401-1370

서울 서부 공개 토론회
KTX 민영화 — 왜 재앙을 낳을 수밖에 없는가?
연사: 박창식(전국철도노조 서울차량지부 활동가, 해고 노동자, 박설(레프트21) 노동 담당 기자)
일시: 6월 29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작은 책 건물 2층 202호 (합정역 2번 출구 '문턱없는 밥집' 2층)
참가비: 2천 원
문의: 010-5133-8896

독자토론광장

7월 4일(수)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의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Letter@left21.com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 기고



5월 19일 전국 교사대회 일제고사 폐지를 위해 투쟁하는 교사들

선생님들의 투쟁은 학생들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김한울 고등학생

올해도 어김없이 6월 26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일제고사가 치러진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전국 1~3퍼센트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표집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국 해당 학년의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치르는 전수평가로 바뀌었다.

특히 일부 학교는 일제고사를 대비해 초등학생들에게 밤 늦게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한다.

표집으로 평가했을 때와 전수평가를 시행했을 때 학업성취도 측정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일제고사의 표면적 목적은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하겠다는 것이지만, 진정한 목적은 신자유주의적 경쟁을 통해 학생 간, 학교 간 경쟁 의식을 심

화시키려는 것이다.

아이들은 성적에 따라 공부 잘 하는 아이와 못 하는 아이로 나뉘도록 강요 받는다. 그리고 이 기준은 사회에 나갔을 때 노동자와 자본가라는 계급으로 나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다.

나도 지난해에 일제고사를 봤는데, 전교조 선생님들이 거의 한 분도 없는 우리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시험 거부가 없었다. 성적표가 나온 후에 평가 기준에 따라 학생들은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이라는 네 단계로 나뉘었고, 기초미달 성적을 받은 친구들이 보충수업 대상으로 지목돼 보충수업을 강요 받는 것은 큰 충격이었다. 부진한 학생을 강제로 보충수업을 받게 함으로써 모멸감을 느끼게 해 참교육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일제고사를 치르는 학생들은 대학생이나 노동자들과는 다르게 선행하거나 투쟁할 수 있는 조직이 없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선생님들의 투쟁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선생님이 일제고사에 대해 설명하고 응시를 선택하도록 해 줄 때, 학생들은 비로소 일제고사의 의의와 왜 거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대로 알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이나 학교장의 눈 밖에 난 여러 선생님들이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았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해고를 보고 이후 저항하는 과정에서 의식이 수직 상승했다.

교육청 열 여섯 곳 중 여섯 곳이 진보교육감임에도 통일된 일제고사 거부 방침을 내놓지 못한 것은 정말 아쉬운 일이다.

이번 일제고사를 레임덕으로 몸부림치는 이명박 정권이 교육 분야에서 마지막으로 발버둥치는 사건으로 만들어야 한다.

여성 스스로 임신과 피임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6월 11일 연세대와 한양대 총여학생회는, 앞서 7월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안)에서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한 것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지정은 여성계의 오랜 요구였는데, 두 대학 총여학생회는 오히려 앞장서서 이를 비난한 것이다.

이에 내가 속한 다함께 연세대 모임은 신속히 논의했고, 이를 뒤인 13일에 성명을 발표해 총여학생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우리뿐 아니라 연세대, 한양대를 비롯한 8개 대학 13개 학생 단체가 15일자로 두 총여학생회의 입장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 앞에서 '여성의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열었고 나 역시 여기에 참가했다.

총여학생회 비판

총여학생회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사후피임약을 맹신한 나머지 사전피임을 소홀히"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사전피임에 실패하거나 성관계 전에 미처 피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막을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사후피임약은 성관계 후 3일 안에 신속히 복용해야 효과가 있는 만큼 의사 처방 없이도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총여학생회는 "대다수의 여성들은 이용이 편하다는 이유로 사후피임약을 일반 피임법으로 오인하여 일상적으



6월 15일 사전·사후피임약 일반의약품 분류와 여성의 임신·출산 결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호르몬 조절로 인한 신체적 스트레스를 느끼는 당사자인 여성들의 판단력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것이다.

또한 "피임에 대한 전국민적 인식"이 지금보다 개선"되기를 바라는 총여학생회가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자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여성 스스로 임신과 피임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사후피임약을 처방 받으려고 의사를 찾아가 성관계 사실을 털어놓는 일은 여성이라면 누구에게든 불쾌한 경험이라 할 수 없다. 하물며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여성들 중에는 성폭행 피해자인 경우도 있어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

적지 않은 여성들이 남녀 간의 불평등, 성관계에서 피임의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현실, 낙태 처벌에 따른 부담감

등의 이유로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막을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두 총여학생회는 일반의약품이었던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결국 연세대 총여학생회는 여성들이 피임 수단에 쉽게 접근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려고 피임약을 사용해 온 많은 여성들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연세대 총여학생회가 진정으로 여성들의 권익을 대변하는지 의문을 품게 한다. 총여학생회는 잘못된 입장을 철회하고 진정으로 여성들의 권리와 이익을 방어하는 데 나서야 한다.

강병준 대학생다함께 연세대 모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편지

〈레프트21〉 동지들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최기원이라고 합니다. 귀 신문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서신과 신문을 보내 주신 점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병역거부를 하게 된 것은, 전쟁은 명백히 민중을 학살하고 착취하는 과정이며, 평화를 위해서는 평범한 시민들부터 전쟁 준비에 동원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한국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대체복무제 없는 징병제 국가이며, 세계 병역거부 수감자의

90퍼센트 이상이 한국인인 실정입니다. 남북 대치의 긴장 속에서 민주주의와 기본적인 인권이 억압되고 수백의 청년들이 감옥에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내 주신 신문 잘 읽었습니다. 특히 기성 언론에서 알 길이 없는 여러 투쟁 사업장 소식들을 알 수 있어 무척 유익했습니다. 동지들의 호의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훌륭한 기사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2.5.29

서울구치소에서 최기원 올림

국가와 자본의 관계에 대한 질문

〈레프트21〉 82호에 실린 기사 '국가와 자본의 관계'를 보고 질문 드립니다.

기사에서 필자는 "일부 급진좌파들은 '국가는 총자본의 대변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은 자본에 맞선 투쟁을 강조하면서 국가에 맞선 정치 투쟁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과 연결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을 "스탈린주의"에 가깝다고 비판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총자본의 대변인"이라는 주장이 어떻게 "정치 투쟁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과 연결"되는지 논거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국가가 부르주아 국가를 가리키는 한, "국가는 총자본의 대변인"이라는 주장은 "정치 투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과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국가는 총자본의 대변인"이므로 자본의 대변인인 국가와의 정치 투쟁을 더 강화하는 경향으로 연결되지 않을까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국가와 자본은 서로 다른 범주의 개념입니다. 현실에서 대립시킬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국가는 계급투쟁의 산물이며, 따라서 '상부구조'의 개념입니다. 자본은 '하부구조', 즉 경제적 개념입니다. 현실에서 대립돼 있지 않은 것을 대립시키는 것은 올바른 유물론적 변증법의 방법이 아닙니다.

국가 자체는 계급투쟁의 산물이고, 계급투쟁의 터전이며, 자본주의 국가는 계급 억압의 도구입니다. 국가의 헤게모니

를 두고 자본가와 노동자가 대립합니다. 따라서 국가 권력을 자본가가 장악하고 있다면 국가 권력이 총자본을 반영·대변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며, 따라서 국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자본가와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정치 투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됩니다.

이 기사에서는 "국가와 자본을 단순히 대립시키지도, 몽둥그리지도 말고 '구조적 상호 의존 관계'를 맺고 있다고 규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오히려 '국가의 자율성'을 강조해서 자칫 국가 권력이 갖고 있는 계급적 성격을 희석시키고, "개혁주의자들이 ... 국가를 이용한 자본주의 개혁"을 하려는 쪽으로 경도될 위험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호 의존 관계'

마치 구조주의를 연상시키는 '상호 의존 관계'라는 개념이 '부르주아 국가는 총자본의 대변인'이라는 개념보다 현실을 더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 개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총자본' 개념은 국가 권력이 '개별 자본'과는 어느 정도 독립돼 있다는 점, 국가 권력이 자본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호 의존 관계'라는 계급성이 결여된 국가 개념이 독자들에게 맑시즘을 더 혼란스럽게 이해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안철환

토론을 일상화하는 조직 좌파의 중요성

6월 18일 12시, MBC 노동자들이 김재철 사장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기 위해 고려대학교에 찾아 왔다. MBC 노동자들은 이전에 고려대에 왔을 때 연락처를 교환한 다함께 고려대 모임 소속 한 회원에게 서명판을 놓을 가판대를 요청했다. 다함께 고려대 모임은 가판대를 가져다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팻말을 만들고 학내 홍보, 과실 방문을 하며 전폭적으로 서명운동을 도왔다. 학생들에게 MBC 노동자들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분위기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

처음에 MBC 노동자들은 우리의 적극적인 연대가 어색한 듯했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나중에는 농담도 주고받으며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시험 기간임에도 학생 1천1백29명에게 지지 서명을 받았다. 우리는 MBC 노동자들이 이후 일정을 논의할 때도 성균관대에 다니는 다함께 회원을 연결시켜 줬다.

우리는 굉장히 우연한 MBC 노동자와의 연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MBC 노동자들의 방문이었음에도 일사분란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평소 정기적으로 만나 활동을 공유하는 조직된 좌파가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다함께 고려대 모임은 평소 언론 파업에 대해 토론해 온 덕분에 MBC 노동자들이 찾아왔을 때 신속하게 그들과 연대할 수 있었다. MBC 노동자들이 고려대에서 성공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것을 도왔을 뿐 아니라 다른 대학으로 확대하는 것에도 도움을 줬다. 나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토론을 일상화하는 조직된 좌파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MBC 파업의 승리를 위해 노동자들과의 연대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낙하산 사장을 위해 일하고 싶지 않다는 MBC 노동자들의 희망에 연대하자!

오정민



극단의 시대, 자본주의와는 다른 대안 찾기

맑시즘2012 MARXISM

7월26일(목)~29일(일) 장소:고려대학교 주최:노동자 연대 다함께



박노자 교수의 맑시즘 추천사

“20여 년 전, 동구권 몰락 때에 '마르크스주의가 죽었다'는 소리는 천지를 진동시킬 만큼 컸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마르크스주의 장례식'은 일러도 너무 일렀고, 마르크스주의는 지금도 여전히 자본주의적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석과 실천의 프레임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수정'이 아닌 자본주의의 철폐만이 유일한 민중 본위의 선택이며, 이 선택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에게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마르크스주의 이론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맑시즘 대화는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국내외 연사들



소티리스 콘토지아니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SKA) 활동가
곽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운영위원장
김기태 <한겨레21> 기자 (대한민국 건강 불평등 보고서) 저자
김영훈 민주노동당 위원장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김지윤 <레프트21> 기자 (일명 '고대녀')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저자
문정현 신부
송경동 시인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이상윤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원, 작업환경 의학 전문의



이유진 녹색당 활동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이종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귀연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장
정성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경상대학교 교수
조영선 인권 교육 강사, (인권, 교문을 넘다) 저자
천보선 전교조 교사, 진보교육연구소 연구원
최인기 빈민해방실천연대 집행위원장 (가난의 시대) 저자
최일봉 다함께 운영위원, 국제 연막 간사
하종강 성공회대학교 노동대학장

※ 이 밖에도 더 많은 진보 운동 활동가, 진보적 학자와 저술가들이 연사로 옵니다.

노동계급의 귀환

- 왜 노동운동이 중요한가
하종강 성공회대학교 노동대학장
- 패널 토론 쌍용차 투쟁 : 희망의 연대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 송경동 시인 & 정중남 다함께 노동조합팀장

차별과 억압에 저항하라

- 패널 토론 사회양극화 시대 여성과 노동
심선혜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 정진희 다함께 활동가
-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그리고 여성해방
최미진 <레프트21> 기자
- 동성 결혼 — 성소수자 차별과 자본주의 가족제도
곽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운영위원장
- 가난의 시대, 도시 빈민의 삶과 저항
최인기 빈민해방실천연대 집행위원장, <가난의 시대> 저자

다른 교육 다른 학교를 말한다

- 패널 토론 학교 폭력과 소외 — 아이들이 왜 망가지는가
조영선 인권 교육 강사, (인권, 교문을 넘다) 저자 & 박태현 전교조 교사, 다함께 활동가
- 비교초기 : 인간 발달의 변증법
천보선 전교조 교사, 진보교육연구소 연구원

※ 이 밖에도 맑시즘2012에서는 수십 개의 흥미로운 워크숍이 개설됩니다. 더 다양한 주제를 웹사이트(www.marxism.or.kr)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참가 신청하세요

참가비 : 하루 13,000원 (26일만 9,000원) / 나흘 40,000원
대학생 할인 : 하루 11,000원 (26일만 7,000원) / 나흘 30,000원
청소년·이주노동자·장기투쟁작업장 노동자 할인 : 하루 5,000원 (26일만 3,000원) / 나흘 15,000원

15% 단체 할인 : 학생회, 노동조합, 동아리 등 한 단체에서 10명 이상이 등록하면 나흘 티켓에 한해 15% 할인해 드립니다.

단체할인가 34,000원 / 대학생 25,500원 / 청소년·이주노동자·장기투쟁 작업장 노동자 12,500원

참가 신청 및 문의

www.MARXISM.or.kr



전화: 02-2271-2395
휴대 전화: 010-4909-2026(문자 가능)
marxism@marxism.or.kr
twitter: @marxismTwit
facebook http://www.facebook.com/marxism.or.kr

아이가 있는 참가자들을 위해 무료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합니다.



계간 이론과 실천의 통일
마르크스21
13호 2012년 봄/여름

가격: 16,000원
www.marx21.or.kr



특집 오늘의 세계 상황

경제 위기, 혁명, 그리고 전쟁에 관한 소문들
중국과 세계경제 위기
오늘날 중국의 현실

논쟁 경제 위기 분석과 대안

진정,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경제 위기에 대한 제대로 된 마르크스주의적 해설을 위하여
자본주의 생산의 실패: 앤드루 클리먼의 최근 논의 검토

쟁점

한국 복지국가 논의 지형과 좌파의 과제
한국 여성 노동의 현실과 투쟁

기획 연재 왜 자본주의는 경제 위기에 빠지는가

2. 1930년대의 대불황

서평

<6월 항쟁: 1987년 민중운동의 장엄한 파노라마>
장엄한 민중항쟁에 대한 탁월한 보고서

구독 문의 | 전화 02-2268-7608, 이메일 marx21@marx21.or.kr, 웹사이트 http://www.marx21.or.kr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등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입처는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